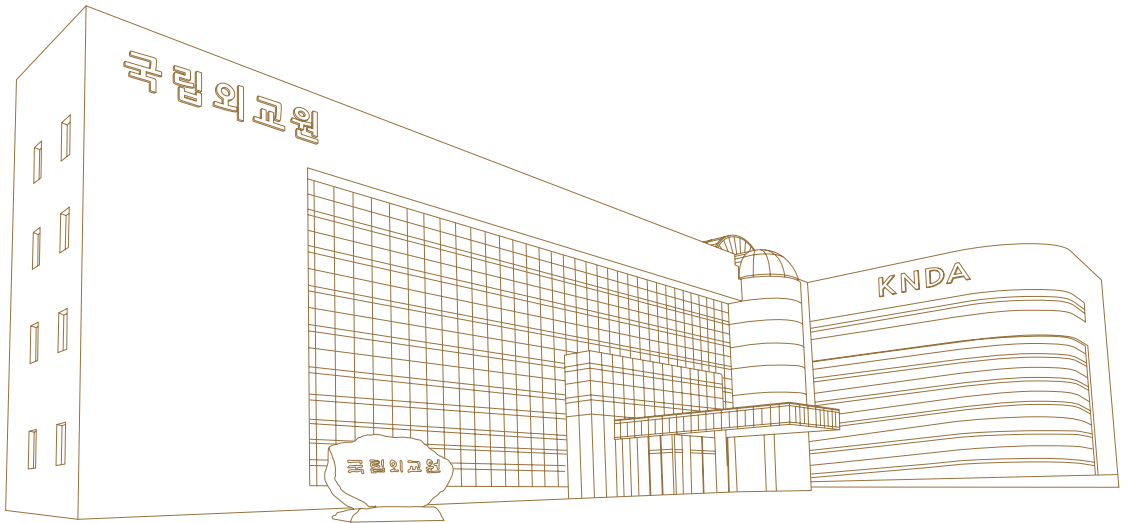


2017 국제정세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국제정세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국제정세전망

인 쇄 2016년 12월 27일

발 행 2016년 12월 27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 행 인 국립외교원장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전 화 3497-7760

팩시밀리 575-5245

홈페이지 <http://www.knda.go.kr>

<http://www.ifans.go.kr>

인 쇄 처 웃고문화사 Tel. 2267-3956

사진제공 연합뉴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2017
국제정세전망

이 책자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서 문



2016년은 한반도에서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유럽의 브렉시트(Brexit),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로 인한 중국과 관련국들 간 갈등,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의 당선, 시리아 난민 위기 및 테러리즘과 같은 큰 사건들이 이어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라고 우려할 만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의 국제 정세는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미 버클리대 교수는 40년 전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가 저술한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를 현 상황에 비교하면 ‘확실성의 시대’였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요인으로 2017년 1월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 경제적 ‘보호주의’ 강화,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 간 관계 재설정, 유럽 내 극우 성향 정부의 출범 증가 가능성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 미·러 관계 개선 전망과 함께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 고조 등의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이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아널드 J.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의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의 역사관이 제시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도전 요인들을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최대한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창의적인 외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기여해온 글로벌·다자 외교는 국내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평화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17년을 앞두고 세계 정치·경제 변화의 흐름과 주요 글로벌 이슈,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 정세들을 파악,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내 유관 기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필에 참여해주신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편집을 담당해준 김덕주·이지용·심상민·민정훈 교수, 유준구·손혜현 연구교수, 고동우·조민근·김기선·김유철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외교안보연구소장 신 동익



제 I 장 | 2017 국제 정치·경제 개관

편집진

제 II 장 | 한반도 정세

1. 북한

이상숙

- 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공고화와 사상 통제 강화_20
- 나. 경제적 자급화 및 지방의 건설 사업 확대_21
- 다. ‘사회주의 문명강국’ 및 ‘체육강국’ 건설 집중_23
- 라. 미·북 관계 개선 모색 및 중국 등 대외 관계 강화 노력_24

2. 남북 관계

전봉근

- 가. 북핵 위기 하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 지속_25
- 나. 북한의 핵위협 고조 및 평화·대화 공세 병행 추진_26
- 다. 남·북 간 대치 국면 지속과 변화 가능성 잠재_27

제 III 장 | 동북아 정세

1. 동북아시아

최우선

- 가. 미국의 아시아 관여 및 재균형 정책 지속 강화_32
- 나. 미·중 갈등 고조 속 협력 기조 유지_33
- 다. 미·일 동맹의 강화 지속_35
- 라.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과 중·러의 제한적 협력 유지_36
- 마. 중·일 관계의 안정화_37

2. 미국

김현욱, 민정훈

- 가. 트럼프 신행정부와 공화당의 협력, 그리고 민주당의 재정비 가속화_38
- 나. 소비 증가에 따른 미국 경제의 성장 기초 유지_39
- 다. 온건하고 현실화된 보수적 국내 정책 추구_40
- 라. 경제와 안보 분야의 차별적인 대외정책 추구_42
- 마. 공세적인 대(對)중국 정책 전개_43
- 바. 견고한 한미동맹 하 세부 이행방안의 재조정_44
- 사. 강경한 대북 압박 속 미·북 대화 가능성 잠재_45

3. 중국

이지용, 김한권

- 가. 제19차 당대회 계기 시진핑 주석 권력 공고화_46
- 나. ‘온중구진(穩中求進)’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예상_48
- 다. 미·중 간 갈등 속 공존을 위한 타협점 모색_49
- 라. 대만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 강화_51
- 마.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지속과 북·중 관계 개선 모색_51
- 바. 중·일 관계의 현상 유지와 갈등 요인 관리_53

4. 일본

조양현

- 가. 안정적 정국 운영을 통한 장기집권 지지기반 확충 노력_54
- 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속 추진 및 불안정 요인 관리_55
- 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일 관계 조정 가능성_56
- 라. 전략 외교의 강화 및 역내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_58
- 마. 한일 관계의 불안정 요인 상존_60

5. 러시아

고재남

- 가. 정국 안정과 경제 여건 호전 속 차기 대선 관심 증대_61
- 나. CIS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 및 ‘민스크 협정 II’ 이행 노력_62
- 다. 러·미/러·EU 관계의 점진적 개선_64
- 라. 아시아 중시 정책의 지속_65
- 마. 대북 제재 지속 하에 남북협력 확대 모색_66

제IV장 | 주요 지역 정세

1. 동남아시아

배금찬

- 가. 미국의 대(對)동남아 정책 변화에 따른 중·일 경쟁 가속화_70
- 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강 국면 유지_71
- 다. RCEP 타결 가속화_72
- 라. 2017년 ASEAN 리더십의 불확실성 지속_73
- 마. 태국 군사정권의 민정 이양 가능성과 반(反)쿠데타 세력의 반격 기회 모색_74
- 바. 말레이시아의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_76

2. 서남아시아

신동익

- 가. 인도·중국 간 경쟁·대립 지속_77
- 나. 중국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인도의 견제_78
- 다. 인도의 경제성장 유지 및 강대국 관계 강화_79
- 라. 파키스탄의 정국 불안 가능성_80
- 마.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 요소 상존 하 재건 노력 지속_80

3. 중앙아시아

고재남

- 가. 권위주의 정부 하 정국 안정 유지_81
- 나. 역내 경제통합 심화와 경제위기 극복 노력_83
-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과 갈등 양상 노정_84
- 라. 역외 주요 국가들 간 세력경쟁 지속_85
- 마. 한·중앙아 협력 지속 및 확대 모색_86

4. 중동

인남식

- 가. 정부군의 우위 예상 속 시리아 내전의 격화_87
- 나. ISIL의 위축·교착 및 테러의 확산 가능성_88
- 다. 이란핵 협상을 둘러싼 논란의 재점화 가능성_89
- 라. 걸프 왕정국가의 위기 가능성 점증_90
- 마. 이·팔 갈등의 심화와 ‘2국가 방안’의 무력화_92

5. 유럽

전혜원

- 가. 영국의 EU 탈퇴 협상 과정의 난관 예상_93
- 나. EU의 안보 분야 통합 진전 시도_94
- 다. 각국 선거에서 반이민 정서 부각과 주류 정당들의 고전 예상_96

6. 아프리카

김동석

- 가. 심각한 폭력사태의 지속_99
- 나. 선거 과정에서의 불안정 야기 우려_101
- 다. 자원 생산 국가들의 경제 회복 및 성장 예상_102
- 라.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고려 또는 추진 예상_104

7. 중남미

손혜현

- 가. 실용주의 우파 정부의 확산 하 여소야대/분점정부의 한계 노정_105
- 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 소폭의 경제 회복세 기대_106
- 다.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_108
- 라. 미국의 중남미 경시와 중국의 중남미 중시_110
- 마. 미·쿠바 관계의 불확실성 증가_111
- 바. 콜롬비아 평화협정 타결과 정치적 갈등 지속_112

제V장 |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 국제 금융·통화

강선주

- 가. 미국의 국제 금융·통화 영향력 지속_116
- 나. 중국 위안화의 약세_117
- 다. 신흥경제국의 부채와 금융 불안정성 증가_118
- 라. IMF 개혁을 둘러싼 미·중 경쟁과 중국 주도의 AIIB의 부상_120

2. 국제 통상

유준구, 최원기

- 가. 다자 무역자유화 협상의 정체 지속_122
- 나. TPP 협정의 표류와 수정 가능성_123
- 다. 중국의 RCEP 협상 타결 노력 하 자국 중심 FTA 추진 강화_125
- 라. 양자 FTA 협상의 가속화 속 선택적인 보호주의 정책 강화_126

3. 국제법과 레짐

황승현, 김덕주, 심상민, 유준구

- 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지속과 협상의 모색_127
- 나. 사이버공간의 국제법 정립 논의에서 주도권 경쟁 심화_129
- 다. 우주를 규율하는 새로운 레짐의 형성 난망_130
- 라. 인권 레짐과 테러방지 레짐 간의 긴장과 갈등 증폭_131
- 마.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현상 가시화_133

4. 기후변화

최원기

- 가. 신기후 체제 움직임 강화_135
- 나. ‘트럼프 쇼크’로 인한 불확실성 잠재_137
- 다. 후속 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갈등 격화 가능성 다대_138

5. 공공외교

김태환

- 가. ‘주창형(主唱型) 공공외교’ 부상과 ‘미디어 외교’ 강조_139
- 나. 한국의 ‘주창형 공공외교’ 플랫폼의 다변화_140
- 다. 미국의 신고립주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역할 정체성 설파_141
- 라. 러시아와 중국의 대안적 가치 지향 공공외교 추구_142
- 마. 일본의 보수적 민족주의와 수정주의 공공외교 전개_143

부록 | 약어표

연구에 참여한 분들



제 I 장
2017
국제 정치·경제
개관

RA² RA² ReAssessment RA²
2017 ReAssessment 2017
ReAssessment ReArrangement
RA² 2017 RA²
2017 RA² 2017
RA² 2017 RA² ReArrangement
RA² 2017
ReArrangement RA² 2017 RA²
2017 ReAssessment
RA² ReArrangement RA²

제 I 장 | 2017 국제 정치·경제 개관



2017년 국제 정세의 특징은 한마디로 ‘RA²’로 표현될 수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정책목표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ReAssessment) 및 재조정(ReArrangement)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2017년 국제 정세는 복잡다기한 양상을 띌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 여파는 세계 정치·경제·외교 부문에 두루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내적으로는 기존 공화당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신고립주의’로 일컬어지는 미국 개입 자제 및 ‘미 국익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외정책의 핵심에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또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관계, 즉 미·중, 미·러, 미·일, 중·러, 중·일, 러·일 관계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인류의 공동선 증진과 역사 발전의 흐름으로 나아갈 것인지, 일정 부분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2017년 국제 정세는 중국 고서(古書)에 나오는 말처럼 “움직이는 듯하나 멈추어 있고, 나아가는 듯하나 제자리에 있을 것이다(若動而靜,似去而留).”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2017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신행정부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일 동맹의 유지·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일본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역내 안보의 공고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가 정상들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을 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미·일 동맹을 적극 활용하여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일본과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간 전화통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향후 대만을 중국 압박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써 대만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경우 양안 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이로 인한 미·중 간 군사적·경제적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중국 견제’라는 큰 구도 하에서 트럼프 신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에서 탈피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對)러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접근은 중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기존의 중·러 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2017년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 구도에서의 핵심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저(低)자세 외교가 자칫 국내적 비판을 야기하여 권력 공고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對中)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경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으며, 미·중 전략경제 대화(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 등을 계기로 미국과의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견된다.

한반도의 경우, 트럼프 신행정부의 미·북 간 직접 대화 시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신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북·중 관계의 이완을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배제된 미·북 양자 대화를 수용할 수 없으며, 6자회담과 같은 다자 간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면서도 각종 대남·대미 평화 공세와 대화 제안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제 공조 체제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내부의 결속을 위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와 사상 통제 강화를 하면서 경제적 자급화와 지방의 건설 사업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규정된 조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17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대북 물밑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일정 부분 옹호하는 ‘북한 끌어안기’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RA²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정세에서도 핵심적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對)동남아 정책 변화에 따른 중·일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ASEAN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추구하는 다면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 지역에서는 각국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정국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테러·영토·이슬람극단주의 등 역내 문제를 둘러싸고 협력과 갈등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Brexit) 투표 가결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 협상 진행에는 난관이 예상되며, 안보 분야에서는 통합 진전을 위한 EU 회원국들과 안보담당 기구와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항인 시리아 내전이 2017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핵 협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재연, 걸프 왕정국가의 위기 가능성 등의 이유 때문에 지역 내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은 자원 생산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예상되나, 종족 분쟁 및 테러 공격과 같은 폭력사태 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폭의 회복세가 예상되는 한편, 우파 정부의 개혁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통화·통상·기후변화·국제법 등 글로벌 이슈들 역시 RA²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 금융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진작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은 성장률 저하 및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IMF 개혁과 AIIB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글로벌 통상 정책은 양자 및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재협상 내지 폐기를, 그리고 중국 등 주요 통상국에 대한 공세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일본, EU는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과 양자 FTA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신행정부는 출범 이후 ‘파리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기후변화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고 국가별 기여 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구체적 이행 점검 및 검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공역의 규율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 증대로 국제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행, 제5차 UN ‘정보 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 보고서 채택, 우주 규범 창설, 국가 안보와 인권과의 긴장,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의 이탈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주창형 공공외교’와 ‘미디어를 통한 외교’가 주변 강국들 공공외교의 특징이 될 것이나, 주안점은 조금씩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한국은 쌍방향적 교류와 다변화 플랫폼의 추구에, 미국은 내향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의 ‘신고립주의’ 정당화에,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의 관점과 대안적 가치 제시에, 그리고 일본은 보수적 민족주의와 수정주의 양상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제II장 한반도 정세



제Ⅱ장 | 한반도 정세



1. 북한

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공고화와 사상 통제 강화

2017년 북한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공고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북한 당국은 2016년의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형성된 김정은 정권의 유일지배체제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은 제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목표들을 이행해나가는 출발점의 해이다. 따라서 당대회의 주요 목표였던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핵강국’을 이룩한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를 과시할 것이다.

2016년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최고 결정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5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당 중심의 권력 공고화를 선포하였다. 또한, 당대회 직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제1비서라는 겸양의 직함 대신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의 직함을 가지게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의 ‘비서국’을 대체하는 ‘정무국’을 신설하고, 주요 엘리트들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김정일 시대보다 더욱 강화된 당(黨)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이는 제7차 당대회 이전부터 진행된 김정일 시대 엘리

트들의 숙청과 교체의 결과물이며,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가 형성되었다.

2017년은 당 중심으로 형성된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를 전 기관 및 전 사회로 확대할 전망이다. 2017년 4월 11일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기념일과 7월 17일 원수 칭호 수여 5주년 기념일을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건설’ 치적을 칭송하고, 지난 5년 동안 지속해왔던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 8월 개최 예정인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통해 선대 지도자들과 함께 김 위원장을 백두산위인에 등극시키며 본격적인 우상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적으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행하기 위한 사상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해외에 상주하는 외교관이나 무역 관련 엘리트들에 대한 통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 사업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 수단인 사치품의 조달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감시 및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경제적 자급화 및 지방의 건설 사업 확대

2017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여파가 확대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자급화(국산화)와 지방의 건설 사업 확대를 추구할 전망이다.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이어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대외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2017년 내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국산화와 건설 경기 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지난 35년간의 경제에 대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한 성과로 정리하였고, 당대회를 전후하여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의 주민 동원을 통해 경제 제재의 압박을 돌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당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이는 북한 경제의 현황 및 전망을 ‘계획’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큰 틀의 국가적 ‘전략’ 방향을 정하여 경제를 이끌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장기 전략은 2016년 12월 결의된 안보리 결의 2321호로 인하여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 결의는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에 수출 상한제를 시행하고 감시 절차도 강화하였다. 즉, 석탄 수출 상한선은 연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낮은 쪽이며, 매월 수입량은 30일 이내에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었다. 석탄 수출 상한 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5년 대비 62%가 감소될 전망이다. 석탄 외에도 동, 니켈, 은, 아연 등의 다른 광물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되어 북한의 광물 수출은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북한은 식량의 자급화와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김정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자급화가 2017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제7차 당대회에서 “전력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자급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에 북한 당국은 수도인 평양의 발전 양상을 지방 도청 소재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방의 건설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상징적 조형물들과 고층 빌딩·아파트 건설을 통해 평양은 외형적으로 크게 변모하였다. 이로 인해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는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지방의 도청 소재지들을 중심으로 살림집과 복지 시설을 확충시키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주택 건설이 북한의 자본가인 ‘돈주’의 자본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들의 자본을 활용한 건설 경기 확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북한 당국은 평양의 ‘애육원’(보육원)과 같은 좋은 시설을 도청 소재지로 확대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 ‘사회주의 문명강국’ 및 ‘체육강국’ 건설 집중

2017년 북한 당국은 제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이를 위한 중점 사업으로 과학기술교육 확대와 스포츠·보건의료 사업에 집중할 것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 대중을 강조하는 ‘인민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왜냐하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시장 경제의 확대에 의한 양극화의 심화와 외부 문화 유입으로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김정은 지도자의 ‘애민’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북한 당국은 2017년에 ‘인민 제일주의’라는 명목 하에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중점 분야인 교육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국방공업과 연계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교육 확대에 비중을 둘 것이다.

다음으로 ‘체육강국’ 건설을 위한 스포츠 분야의 투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 분야는 김정은 위원장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북한은 국제대회 유치와 국제경기장 건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 등을 시행해왔다. 예를 들면, 북한 축구 남자 대표팀은 최초로 서방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였으며, 해외 전지훈련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스포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사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의료 체계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

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質)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사업은 해외 우수한 의약품이 보급되고 선진 의료기술의 도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외교역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 미·북 관계 개선 모색 및 중국 등 대외 관계 강화 노력

2017년 북한 당국은 새롭게 들어선 미국 트럼프 신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미·북 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경우,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북한은 제7차 당대회 개최 등의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핵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스스로 대외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가령, 제7차 당대회 개최시 쿠바, 베트남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외 축하 사절단의 방문이 거의 없었고, 단지 국내 잔치로만 끝났었다. 또한, 북한 대외무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북한은 미국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신정부에 대한 탐색전을 거친 후 적극적으로 양자 대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북한은 비공식 루트를 통해 미국의 전직 관료 및 전문가들과 접촉하여 차기 행정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2017년 초반에는 트럼프 신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다가 만약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제외될 경우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해 갈등적 편승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접촉시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정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바 있어 미·북 양자 대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북한은 결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직후 북한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방중하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개선의 조짐이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 하반기 중국 측의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절하고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양국 관계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북한이 대북 제재 타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중국이 미·북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줄 경우,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타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남아 및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지역은 원유의 공급지이고, 동남아 지역은 원유 수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8월 개최 예정인 ‘백두산위인칭송대회’의 준비위원회 결성위원이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태국 등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대회를 계기로 동남아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 남북 관계

가. 북핵 위기 하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 지속

2017년 한국의 대북 정책은 국내외 불확실한 정치 변수 속에서도 북핵 문제로 조성된 대치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조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6년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채택하여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추진하였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경제, 외교, 대외활동 전반을 제재함으로써 북한 정권과 체제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외화 획득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을 4억 90만 불 또는 750만 톤으로 제한하고, 새롭게 금속류의 수출을 금지시켰으며,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가 획득한 외화가 핵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매년 현금 수익 8억 불이 줄고, 국제 금융 활동이 사실상 퇴출되며, 일체 대외 경제활동과 여행객들이 용의선상에 놓이게 되고, 해외 북한 근로자의 수도 크게 줄게 된다. 또한,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자국 내 북한 공관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 공관의 상업적 수익 사업을 금지시키면서 단 1개의 금융 계좌만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정책도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 2017년에도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북한의 핵위협 고조 및 평화·대화 공세 병행 추진

2017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면서도 각종 대남·대미 평화 공세와 대화 제안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제 공조 체제의 이완을 시도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2017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핵실험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미사일, 중·장거리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등 운반체 개발에 더욱 집중할 전망이다.

2017년 북한의 대남 정책은 2016년에 제시되었던 각종 대남 정책 기조와 제안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무장’과 ‘경제건설’의 병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 기만적인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 북한이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주장들이 반복될 것이므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대남 정책과 핵 정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서 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의 제재 효과와 최근 북한 내 식량부족 현상이 있다.

2321호는 향후 북한의 교역 및 외화 소득과 외교 활동을 크게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가 2016년 12월 발간한 ‘곡물 전망과 식량 상태(Crops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식량주기 동안에 곡물 약 69만 톤이 부족한데 2016년 10월 현재 약 16만 톤의 곡물 수입에 그쳤다. 2017년에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추가 식량 도입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과 취약계층에서 식량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정은이 여전히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식량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만큼, 식량부족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7년에도 김정은 체제는 내부의 정치·경제 위기와 식량부족을 극복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과 평화 공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극단적인 핵·군사 도발은 한국 내 정치의 보수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신행정부의 반북화(反北化)를 초래할 것이므로, 당분간 북한이 대외적 도발을 자제한 채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017년 중반 이후 제재 결의 2321호와 식량부족에 따른 내부적 충격이 축적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강한 도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상되는 도발로는 6차 핵실험, 잠수함 및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해상과 육상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 도발 등이 예상된다. 한편, 이산가족을 위한 남북대화, 평화협정을 위한 미·북 협상 제안 등과 같은 대화 공세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 남·북 간 대치 국면 지속과 변화 가능성 잠재

2017년에도 김정은 체제는 핵 능력을 증강하고 대남 핵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 관계가 향후 상당 기간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미·북 간 고위급 대화, 북한의 핵동결 선언, 북·중 정상회담 등이 이뤄진다면, 남북 관계도 급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핵 선제공격 위협 및 청와대 모형시설 공격연습 공개 등으로 위협했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선제타격 및 김정은 제거 위협, 정밀타격 능력 향상, 전략무기 시위 등으로 대응하였는바, 이러한 군사적 긴장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이 대화 공세의 일환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제안하더라도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2017년 후반 들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전면적으로 집행되고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도 제재를 충실히 집행하게 되면, 북한의 생존 공간이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이때 북한이 일부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협상 카드로 하여 미국, 중국과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북 대화, 북·중 대화 등을 통해 북한 핵 활동 동결, 6자회담 재개, 식량 지원 등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 북한의 핵무장 고수 태도에 비추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외부 요인이 있다. 우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회담 변수가 그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미 정부 안팎에서 북한에 대한 높은 불신을 감안할 때 실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계속하여 거론될 것이나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적다. 세계적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세계적 말썽꾼인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대좌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북한이 중국에 핵 동결과 6자 합의 준수 및 6자회담 참여를 약속한다면,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무장 동향을 볼 때, 북한이 중국에 이런 비핵화 약속을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제3장 동북아 정세



제Ⅲ장 | 동북아 정세



1. 동북아시아

가. 미국의 아시아 관여 및 재균형 정책 지속 강화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신행정부는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는 달리, 아시아에서 기존의 관여(engagement)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군사적 요소를 강화하는 재균형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중동 지역에 대한 관여를 축소하면서도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위에 재균형 정책을 통해 역내 관여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출범 후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관여 수준을 좀 더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관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관되게 미국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거론해 왔고, 이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장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참모들인 알렉산더 그레이(Alexander Gray)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도 미국의 '안정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트럼프 신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구상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재균형’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사실상 미국 행정부와 의회 내에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관여 정책 필요성에 대한 강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바, 향후 아시아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탈퇴 가능성이 높아 재균형의 경제적 요소를 약화시키겠지만 군사적 재균형은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현대화를 경계하고, 이에 대응해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통한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 과도한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제약이 있었지만, 이미 시퀘스터(sequester: 연방 예산의 자동 삭감) 폐기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상당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벌리기 위해 정밀 장거리 타격무기, 자동화된 무인무기 체계, 전자무기 등 첨단 군사기술을 활용한 미래무기 개발 중심의 군사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또한 중국의 증대되는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중동 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개입을 자제하면서 첨단 전력을 중심으로 아시아로의 군사력의 점진적 재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군사적 재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안정의 가장 큰 원천인 해군력을 350척 수준으로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군사력 재배치의 속도와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국방부 내에서도 아시아로의 점진적 군사력 재배치에 대한 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미·중 갈등 고조 속 협력 기조 유지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중국 역시 상당히 강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안정에 깊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미·중은 여전히 갈등 수준을 관리하면서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트럼프 신행정부의 증대되는 경제적·군사적 압력에 대해 혼재된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주의적 힘의 정치를 중시하는 미국의 신행정부는 중국의 기대와 달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역내 해군력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인공섬 조성 재개와 무력 시위 등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영토 이익을 수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신행정부의 경제적 압력은 중국의 상당히 강한 보복을 유발하면서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 신행정부는 대만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을 통한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이에 대해 미국과 대만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과도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와 실질 협력을 시도하면서 기존의 유화 정책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미국이 경제적 힘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이익을 관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바, 국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무역전쟁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력을 통해 자신의 핵심 공약을 실천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강한 힘의 우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격한 군비증강을 통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작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봉쇄(containment)를 추진해 중국을 본격적인 군비증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강대국의 등장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다.

한편, 미국은 세력권 분할과 지역의 공동 관리를 전제로 한 ‘신형대국관계’와 같은 중국과의 담합(collusion)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동맹 체계를 급격히 약화시킬 것이고,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과 상충된다.

세력균형의 변화와 점차 공세적으로 변화하는 중국의 행동 패턴이 미국 신행정부의 보다 강경한 정책과 결합되어 미·중 간 경쟁 증대의 추세가 더 강화되겠지만, 양국은 여전히 협력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후 내부 논의와 경험을 통해 전략적 상황과 양국이 공유한 현상 유지에 대한 이익을 인식하고, 협력과 견제를 결합한 기존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미·일 동맹의 강화 지속

2017년 미·중 간 갈등 고조는 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인바, 미·일 양국은 역내 분쟁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제고하는 등 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화 작업을 진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미국과 일본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구체화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국의 군사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왔다. 사실상 미·일 간에는 견고한 유대가 존재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헤징(hedging)의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역내 지위 유지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져 온 미·일 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중요 정책 참모들 역시 미국의 지역 안정자 역할과 동맹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미국의 비용 부담을 비판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비용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거부시 동맹 파기를 위협했는데, 신행정부 출범 후 비용분담을 둘러싼 진통이 있겠지만, 미·일 동맹 강화의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빠른 세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역시 선제적으로 동맹을 관리하려는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 특히, 대선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은 동맹 관리의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미·일 동맹의 강화는 한미동맹 강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향후에 이른바 ‘미·중 간 균형’을 추구할 경우, 양 동맹 간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한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라.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과 중·러의 제한적 협력 유지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일 강대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정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는데, 특히 차기 국무장관에 지명된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는 미·러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러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 양국 간 갈등을 빚은 사안들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신행정부 내부에서 파장이 예상되며, 2017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미·러 관계 개선은 또다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트럼프 신행정부 내에서 국방부와 국가안보위원회 등 국방·안보 부처와 국무부 간의 이견차가 생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에 시리아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고 중·러 관계의 이완을 목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의회와 행정부 내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反)러시아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경제 제재를 행정명령으로 해제하려 할 경우, 의회는 입법화를 통해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사일발어 등 갈등적 이슈들뿐 아니라 유럽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양국이 본격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에도 유일 강대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정한 외교·안보적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주로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공조와 일정한 수준의 군사훈련 등을 포함할 것이다. 하지만 양국이 본격적인 대미 견제 군사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

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견제 강화를 두려워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는 러시아와의 동맹 결성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역시 미국에 대한 일정한 외교적 견제를 위해 중국을 활용하고 있지만, 긴 국경을 접하고 있고 빠르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최첨단 무기의 판매를 피하고,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對)중국 헤징(hedging)을 계속할 것이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및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했지만, 양국 협력이 미국에 대한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약간의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러 관계의 정체는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협력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외교적 공조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여전히 강한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마. 중·일 관계의 안정화

2017년 중국과 일본은 양국의 갈등적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현상유지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일본은 2014년 말 이후 형성된 일정한 타협 방식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안정화시켰으나,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따른 위기감과 중국의 역사적 반감이 영토분쟁과 결합되면서 양국의 갈등적 관계는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지나친 외교적 부담과 군사적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갈등을 일정한 선에서 제어하고, 대체로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외교적 부담이 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과의 지나친 갈등을 피해 전선(戰線)을 줄이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보 전략의 변화를 위한 국내적 동원을 마무리해 외부적 갈등을 증폭시킬 유인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베 정부도 이미 갈등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안정의 공동이익에 기초한 미·중 간의 협력 기조는 중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를 일정한 선에서 제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이 센카쿠열도(尖閣列島)/다오위다오(釣魚島) 방어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는 한,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피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과도한 공격적인 행동을 제어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갈등적인 중·일 관계는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지속시킬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 변동과 여전히 강한 반일 감정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넘어선 안보협력의 진전에 상당히 강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가. 트럼프 실행정부와 공화당의 협력, 그리고 민주당의 재정비가속화

2017년 미국 국내정치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 실행정부와의 화해·협력, 민주당의 경우 세대교체 등 재정비가 예상된다.

2016년 대선 동안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와 갈등을 빚었던 것은 사실이나,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뿐 아니라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도 공화당내 신뢰가 높은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 당선인을 인수위원장으로 하여 트럼프 실행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을 진행하였다. 2016년 12월 중순 현재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를 포함한 실행정부의 조각 작업은 거의 완료되었는데, 트럼프 초대 내각의 특징은 '백인 남성', '억만장자', '군인', '반(反)오바마'로 요약되어지고 있다.

반면 대선은 물론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척 슈머(Chuck Schummer) 뉴욕주 상원의원이 새로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으며,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버몬트주 상원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은 각각 대외협력위원장과 의원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하원에서는 지도부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년간 원내대표직을 맡아온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에 맞서 당내 소장파 세력이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패배를 계기로 당을 재정비하지 못할 경우 2018년 중간선거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내 재정비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나. 소비 증가에 따른 미국 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는 트럼프 실행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에도 소비 증가에 힘입어 2%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3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3.2% 상승한 것

으로 수정 집계됐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7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월가 전문가들은 2.2%로,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3%로 예측하였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중 공약했던 것처럼 경기 부양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 등의 재정확대 정책, 그리고 법인세 15% 인하 등의 감세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 미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비 회복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고용시장이 안정되면서 시간당 임금의 상승, 양호한 가계채무 건전성 등 소비 개선의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다. 2016년 8월 미국의 실업률은 4.9%로 자연실업률 4.8% 수준에 근접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80주 연속으로 30만 건을 하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015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고, 가처분 소득 대비 총 부채율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있다. 투자 부문은 아직까지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재고 조정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으로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온건하고 현실화된 보수적 국내 정책 추구

2017년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보수적인 국내 정책 기조 하에서 극단적인 핵심 공약을 수정하여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 기간에 극단적인 주장을 일삼았던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과연 그의 극단적인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에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당선 수락연설에서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를 위로하고 미래와 통합을 강조했으며, 또한 그의 대선 핵심 공약이 수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실행정부의 정책이 극단적인 형태를 띠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7년에는 백악관과 연방의회를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보수적인 국내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진보적인 정책들, 즉 파리 기후변화협정, 오바마 케어(Obama Care) 등이 수정·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재고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오바마 케어도 2017년에 철폐하고 유예기간(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2016년 2월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 전 대법관 후임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메릭 갈란드(Merrick Garland)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 대신에 보수 성향의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여러 명의 후보를 물색하고 있으며, 자신의 임기 초반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총기 규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총기 소지 권리를 강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6년 대선 기간 중 트럼프 후보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 주장은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3일 200~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범죄자 우선 추방 등 이민 공약의 단계적 실천 방안을 공개했으며, 미국·멕시코 간 국경에 장벽을 설치할 것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된 다음에 누가 미국에 잔류해도 괜찮은 사람들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전원 추방하지 않고 일부는 구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 시민이 아닌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0일 연방의회에서 “의회에 무슬림 입국금지를 요청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큰 무슬림 입국금지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무슬림의 미국 입국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지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경제와 안보 분야의 차별적인 대외정책 추구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는 경제·통상 관계에서 보호주의적 접근을 취할 것이나, 안보 분야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는 경제 문제와 이민 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고립주의 기조는 기업가적 마인드에 기반을 둔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미국 이민자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기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공장과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민 및 경제·통상 정책에 있어서 보호주의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트럼프 신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통상 관계에서 일방주의적(unilateral)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이 체결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의 주요 통상 협정에 대해 재협상 내지 폐기 움직임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과거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슈퍼 301조’와 같은 고율의 관세 부과 및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가 대외 안보 정책에서 가감 없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시 언급한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체제와 리더십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요 지역에서 트럼프 신행정부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을 높이고 미국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취하겠지만, 이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개입을 축소하고 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을 두어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군대를 강화하고 미국의

주요 이익이 걸린 지역과 이슈에서는 개입과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 공세적인 대(對)중국 정책 전개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경제·통상 관계를 중심으로 압박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공·해군력 증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경제적 위협이 된다는 점, 위안화 평가절하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용해 미국 제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의 환율조작,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협력 강화, 무기수출 등 경제적인 수단을 통한 대(對)대만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와 체제를 구축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팽창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신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비해 오히려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대외 경제 의존도는 약 30%까지 줄어들었으며, 향후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약화시켜 양국 간의 갈등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력에 타격을 주기 위한 과감한 대중국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신행정부는 기존 아시아 정책의 기본 틀인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강조할 것으로 보

인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정책적 수정을 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주요 지역으로의 공·해군력 증파를 통해 군사력 강화 및 증강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 대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언급을 하였지만, 트럼프 실행정부는 결국 미국의 주요 이슈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 개입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바. 견고한 한미동맹 하 세부 이행방안의 재조정

2017년 한미동맹은 견고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확장억지전략 등의 세부 사안이 재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상향 조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적이윤을 중시하는바,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실행정부는 2018년에 예정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2017년부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은 GDP 대비 2.5% 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바,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향 요구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ce) 체제의 구축을 언급하였으므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배치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측에 이의 비용 분담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트럼프 실행정부가 동맹 관계에서 한국을 방기(abandonment)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들과의 협정들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이 북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상향 요구를 위한 협상용이며, 동맹의 견고함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국제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먼저 이양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시아 개입 및 리더십 유지를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군 체제하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며, 또한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및 철회 모두 한국의 요구로써 행해졌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5차례의 핵실험 등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핵 불균형이 점점 더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2016년 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새롭게 구성하여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보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제48차 SCM에서 시도되었던 미국 핵전력의 상시 순환배치와 같이 방위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를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는다.

사. 강경한 대북 압박 속 미·북 대화 가능성 잠재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미·북 간 직접 대화 시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 성향과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고려할 경우, 양자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라는 기존

의 접근법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확실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대북 제재의 틈새를 막는데 성공하지 못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CIA 국장,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 등 현재 내정된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판단해볼 때,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소멸해야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질 정도로 매우 강경하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미·중 관계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 압박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북한 문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 금융 제재의 수위를 점점 높여갈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중국과 북한 문제에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중국

가. 제19차 당대회 계기 시진핑 주석 권력 공고화

2017년 중국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주석 권력 공고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파워 엘리트’ 구성을 둘러싸고 그룹 내 권력투쟁과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중국공산당은 19차 당대회 개최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19대(大) 시기, 또는 시진핑 집권 2기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2017년은 시진핑 집권 2기인 19대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강도 높은 반(反)부패 운동을 전개하면서 개인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운동을 지속한 결과 장쩌민(江澤民) 시기 이래 포진했던 구(舊)엘리트 그룹이 대폭 퇴출되고, 신진 엘리트 그룹이 형성되었다. 2016년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의 인적 기반을 마련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2017년은 19차 당대회 이전까지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 인적 기반의 핵심이 될 ‘파워 엘리트’ 구성을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다만, 권력의 핵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의 인선을 둘러싸고 엘리트 그룹내 권력투쟁과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거물급 인사의 낙마로 이어지는 부패 스캔들이 터질 개연성도 있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수가 18대(大)에 이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대에서는 기존 9명으로 구성되었던 상무위원회의 인원이 7명으로 축소된 바 있다. 만약 구성 인원수에 변화를 줄 경우,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다. 2016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당의 핵심(核心)’으로 공식화된 시진핑 주석이 권력의 정점인 상무위원회의 인원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18기 6중전회 공보(公報, 결과 보고서)에서 ‘핵심’ 칭호와 함께 집단지도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핵심’ 칭호는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이 아닌 ‘권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 주석의 권력 강화 논쟁과 관련하여 ‘7상 8하’(당대회에서 67세 이하는 정치국 위원에 유임되며, 68세 이상은 정치국 위원 퇴임) 규정의 예외에 대한 논의가 2017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 논의의 초점은 과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인 왕치산(王岐山)이 제19차 당대회에서 유임되느냐에 맞추어져 있다.

나. ‘온중구진(穩中求進)’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예상

2017년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안정속 성장을 유지한다는 의미의 ‘온중구진(穩中求進)’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이 밝지 못한바 실물경제 침체로 마땅한 자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산황(資産荒)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7년은 중국의 ‘13·5 계획(規劃)’ 2년 차에 접어드는 해이다. ‘13·5 계획’의 목표는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신(新)성장 동력산업을 촉진하고 동시에 중고속(中高速)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6년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로 대변된 중고(中高)성장기에 접어든 중국 경제는 정부 목표인 6.9%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과잉 중복 투자와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에 주력하면서도 성장률을 유지하는, 상호 부합하지 않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수치는 형식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경제성장의 내용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개혁 추진의 여파로 민간투자 증가율은 2015년 10.1%에서 2016년 3분기까지 2.5%로 대폭 하락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를 20.6%까지 증가시키면서, 적극적 통화 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소비 증가율을 유지함으로써 민간투자 하락과 경기하강 압력에 대처했다.

이러한 배경 하 2017년 중국 정부는 안정적 경제성장률과 적절한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과 민생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의 ‘온중구진(穩中求進)’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밝지 않다.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투자, 소비, 수출 등의 동력이 구조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구조개혁 지속 기조 속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고,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는 소비 또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프(Donald Trump) 신행정부 출범 후 중국에 대한 징벌성 무역보복 조치가 내려질 경우, 중국의 수출산업은 단기간이겠지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 경우 중국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유동성 공급 등의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과잉공급된 인프라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투자와 소비 양면에서 압박이 지속되고, 오히려 과잉유동성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위안화 약세의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을 문제 삼는 가운데 위안화 약세는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딜레마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17년은 중국 경제가 경제성장률 저하 압박을 2016년보다 더욱 크게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률이 중고(中高)성장에서 중저(中低)성장으로 바뀌면서 중국 국내에 공급된 대규모의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산황(資產荒)’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자산황 현상은 중국 국내외에 투자의 양극화와 과도한 편중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을 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적 외화유출현상 또한 가속화시킬 수 있다. 경제운영 전 영역에서의 압박은 중국 정부가 안정속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 경제 악화와 대미(對美)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중국에 대한 교역 편중이 심한 국가들의 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다. 미·중 간 갈등 속 공존을 위한 타협점 모색

트럼프 신행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경제와 안보 이슈 전반에 걸쳐 대(對)중국 강경 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2017년 미·중 관계 마찰이 표면화될 것이지만, 양국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압력을 강도 높게 펼치면서 중국의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비(非)

관세장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조달 시장과 금융·서비스 산업 개방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남중국해, 미국·대만 관계, 그리고 대북(對北) 제재 참여 등 민감한 현안 문제를 놓고 중국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 정권의 권력 공고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수세적 대응은 국내적 비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시진핑 주석이 2016년 10월 제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칭호를 받음으로써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리더십 공고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이려 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써 대미(對美) 정책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즉 미국의 압박으로 촉발될 수 있는 반미 감정과 민족주의 정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중 관계는 대외적 요인 외에도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인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진핑 정부는 출범 이후 ‘주동작위(主動作爲)’로 표현되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취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등도 감수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확장 정책, 차이잉원(蔡英文) 정부 출범 후 대만에 대한 원칙적 강경론, 한국에 대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압박 외교 등은 절충과 타협보다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7년 중반에 개최될 제9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Strategic & Economic Dialogue)를 기점으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중국과 미국은 점차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등 전 영역에서 여전히 우위를 보이는 미국과 타협을 통해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중국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충돌을 회피하고 아·태 지역의 안보에서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더 부합하다고 여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중 양국은 협

상을 통한 갈등 이슈 해소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2017년 하반기쯤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라. 대만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 강화

2017년 미국의 대만을 통한 중국 압박과 맞물려 중국 역시 대만에 대한 공세적인 정책을 취할 경우, 양안 관계가 미·중 갈등의 쟁점이 되고 차이잉원 정권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5월 민진당(民進黨) 소속의 차이잉원이 대만 총통으로 취임했다. 차이잉원 총통 이전 국민당(國民黨)의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기에는 대만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관리하였다.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이른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차이잉원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오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중국인의 대만 여행 방해와 주중(駐中) 대만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불이익, 그리고 대외관계에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 조장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2016년 12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과 대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국내적으로 차이잉원 총통이 소속되어 있는 민진당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민진당과 국민당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함으로써 차이잉원 총통을 고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지속과 북·중 관계 개선 모색

새로운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 미·중 경쟁 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북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북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북·중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의 북·중 관계는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굴곡을 겪었다. 중국은 UN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하에서 크게 세 가지의 정책적 움직임을 보여 왔다.

첫째,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동참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를 흔들거나 북한에 커다란 혼란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중국은 동 결의에 예외로 명시된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무역’과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제재의 강도를 조절해왔다.

둘째, 중국은 대북 제재와 북·중 관계 개선을 분리하여 접근해왔다. 이는 2016년 6월 1일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동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북·중 간의 이견이 드러나긴 했지만, 결국 역내 미·중 간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제재’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추구하였다. 중국은 현재의 제재 국면이 미국에는 동북아에서 군사·안보적 영향력을 높이는데 유리한 반면 중국에는 전략적 손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의 양회(兩會) 기간인 2016년 3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의 기제로 전환하는 병행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임을 주장했다.

2017년 북·중 관계의 변수는 미·북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배제된 미·북 양자 대화보다는 6자회담 또는 다자 간의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협상을 추구할 것이다. 현재의 냉각된 북·중 관계 하에서 중국이 배제된 미·북 대화가 개최되어 전격적으로 미·북 관계의 개선을 불러온다면, 이는 자

첫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급속히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합의된 조치를 당분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첫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것과, 둘째 만약 2017년 또 다른 북한의 핵 실험이 실행된다면 역내에서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 차이가 다시 부상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 중·일 관계의 현상 유지와 갈등 요인 관리

2017년 중국과 일본은 영토분쟁, 역사 인식 등 갈등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현상 유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의 중국의 대일(對日) 관계는 현상 유지와 갈등 요인의 관리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일 전략은 2017년에도 이어지리라 전망된다. 현재 중·일 간의 갈등 요인들인 영토분쟁, 역사 인식, 미·일 동맹의 중국 견제 등은 단기간 또는 최고 지도자 간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동중국해로까지 영향을 미쳐 중·일 간 영토분쟁 문제가 재부각된다면, 중국은 미·일 동맹과 확대된 전략적 경쟁을 펼쳐야 한다. 이럴 경우 중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러 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이은 러·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다. 현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역내 구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동북아 정세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역내 역학 구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2017년에도 중·일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대일 관계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4. 일본

가. 안정적 정국 운영을 통한 장기집권 지지기반 확충 노력

2017년 일본 정치는 자민·공명의 연립정권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예상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기반 확충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06년부터 6년 동안 매년 총리가 바뀔 정도로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했지만, 2012년에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 대단히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네 차례의 국정선거에서 압승하여 중·참 양원에서 연립 여당에 의한 절대다수를 확보하여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특히 아베 내각은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경제, 외교·안보, 개헌 등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과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높은 내각 지지율, 안정적인 경제지표, 야당의 약체화 등을 감안할 때, 2018년 이후까지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가능성은 커졌다. 당내에 ‘포스트 아베’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자민당은 2016년 9월에 총재 임기를 3기 9년까지 연장하는 당규를 개정하였다.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의 당 총재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여 경제 활성화, 헌법 개정, 대외관계 등에서의 성과 거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내각 지지율, 경제 상황, 야당의 선거 협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중의원(2018년 12월에 임기 만료) 해산 및 총선거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안정된 내각 지지율, 의회 내 개헌 발의 요건의 성립, 국민

들의 개헌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배경으로 의회 내에 헌법 개정 관련 움직임이 구체화되겠지만, 실질적인 진전에는 난관도 예상된다. 2016년 참의원 선거 결과, 전후 최초로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베 총리는 2016년 9월 국회에 대해 개헌 관련 정식 논의를 요청한 이래,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하였다.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강한바, 자민당 지도부는 환경권, 긴급사태 조항 등 의회 내 동의를 얻기 쉬운 항목부터 개헌을 실현하고, 이후에 제9조를 개정한다는 이른바 2단계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관련 각 당의 입장은 적극(자민당, 일본유신회), 용인(민진당, 공명당), 반대(사민당, 공산당)로 구분되지만, 개헌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속 추진 및 불안정 요인 관리

2017년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디플레이션 탈출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내의 개인소비와 투자심리는 중국 등 글로벌 신흥시장의 불투명성,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및 불안정성,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즉 미·일 환율/통상 갈등 가능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체결의 불발 등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재생과 재정 재건 간의 정책 충돌, 육아·의료 등 사회보장 정책의 재원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난제도 예상된다.

지난 4년간 아베 내각은 지속적인 엔저 정책과 공격적인 재정 지출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도한 결과, 주가와 개인 임금의 상승, 수출의 호조라는 성과를 낸 반면, 개인 소비와 기업의 설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일본

경제는 2016년 3/4분기까지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적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적극적인 금융·재정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병존하는 가운데, 아베 내각은 2017년에도 전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2017년에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구조개혁, 저출산·고령화(少子高齢化) 대책, 여성 인력의 활용('1억총활약사회' 실현), 법인세 완화, 지방 활성화(地方創生), 전력 시장 및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이들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경제적 고통이 수반되는 바, 아베 내각은 즉효성이 있는 금융 및 통화 정책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일 관계 조정 가능성

오바마-아베 시기에 미·일 동맹의 재편·강화와 TPP 추진을 양대 축으로 하여 밀월기를 구가하였던 미·일 관계는 2017년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미·일 대(對) 중국'이라는 전략적 경쟁 구도가 선명해졌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아베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 간에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일 협력이 강화되었다. 2016년 3월에 안보법제 시행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미·일 동맹 일체화는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동맹의 부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일

본은 ‘아·태 지역 안보의 초석’인 미·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고립주의의 입장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였다. 동시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의 대폭적인 강화 즉,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제시하고 있는바,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이후 미·중 간 경쟁 구도를 감안한다면, 트럼프 신정부 역시 아·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제고를 토대로 종래의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미국의 실효적 대응, 센카쿠열도(尖閣列島)/다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북핵 관련 확장역지의 실효성, 북한 비핵화 문제의 정책 우선도 등과 관련하여 일본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을 미국이 불식해주지 못할 경우, 미·일 동맹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응 역량 강화, 공동 정보수집·정찰 활동 확대, 인도·호주·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과의 다자 연대와 같은 오바마-아베 정부 시기에 미·일 양국이 공유했던 중국 견제의 정책 방향성이 유지될 것인가도 일본 측의 관심사이다.

한편,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국 신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동맹 관계 여부를 막론하고 양자적 접근을 통해 환율 및 무역역조 시정,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 체제의 전략성을 인식하고 다자주의를 중시한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할 때,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안보보다 경제를 중시하고,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적인 접근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경제와 중산층의 부활을 위해 동맹국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레이건 정부 시기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무

역보복 조치를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에 대해 환율조작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엔저를 기조로 하는 일본의 통화량 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TPP 비준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TPP 회생을 위한 노력과 함께 TPP 부재 상황에 대비한 통상 정책의 방향 설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TPP를 성장 전략의 핵심이자 미·일 동맹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TPP의 의회 비준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 TPP 이탈’ 선언 등 TPP 발효가 매우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등의 무역자유화 교섭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전략 외교의 강화 및 역내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

2017년 일본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갈 것이며,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일본 외교가 경제 중심의 수동적인 행태를 보인데 비해, 아베 내각 하에서의 일본 외교는 ‘적극적 평화주의,’ ‘주장하는 외교,’ ‘지구의 외교’ 등의 기치 하에 국제적인 정치·안보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16년 5월 G7 이세시마(伊勢志摩)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외교의 존재감을 과시하였듯이, 향후에도 정상외교를 활용한 발신력(発信力)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對)중국 외교는 정치·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더라도 가능한 분야에서 대화와 실질 협력을 도모하는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들어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방위력 정비와 미·일 동맹의 강화, 국제적인 다자

연대의 확대를 추구해 왔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관련하여 ‘법의 지배’와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고, 중국의 인공섬 조성을 반대했다. 또한, 호주, 인도를 비롯한 ASEAN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확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국가들에 경제 원조를 제공해 왔다. 2017년에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특히 2016년에 신정부가 출범한 필리핀과 대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중 관계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필요성 및 2017년 일·중 관계 정상화 45주년 등을 감안하여 정상회의를 비롯한 정부 간 대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센카쿠열도(尖閣列島)/다오위다오(釣魚島) 인근의 해·공 연락 메커니즘 조기 설립을 통해 일·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초반에 센카쿠열도(尖閣列島)/다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던 일·중 관계는 2014년에 4개 공동인식 합의를 계기로 양국 간에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회의가 재개되는 등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일·중 관계는 역사 인식과 동·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협력 관계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도한 갈등을 억제하면서 소통을 유지하는 소극적 안정화 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른바 ‘전략적 호혜 관계’ 혹은 일·중 간의 ‘뉴노멀(new normal)’ 상태로 전환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베 내각은 국익 극대화와 대중 견제 차원에서 러시아와 쿠릴열도/북방영토 문제 교섭 및 시베리아·극동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는바, 2017년에도 일·러 관계 개선을 지속 추구해 나갈 전망이다. 2016년 12월 일·러 정상회담에서 북방 4개 도서(쿠릴열도)와 관련해 ‘특별한 제도’하에서 공동 경제활동 실시, 2017년 6월 중에 평화조약 체결 협상 실시 등에 합의한바 그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국제적인 대리 제재 조치는 일·러 간 협력의 제약 요인이었으나, 트럼프 신행정부가 미·러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아베 외교의 전략 공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일·북 간의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7년에도 북·일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5월에 납치자 문제 재조사 합의 이후 북한은 그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였고,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 기초를 유지하면서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한·일 관계의 불안정 요인 상존

2017년 한·일 관계에는 위안부 문제 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관련 현안들뿐만 아니라 대북 공조 및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등의 주요 이슈들도 제기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경색 국면이 계속되었다. 2015년 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와 2016년 초 북한 핵 도발 이후 한국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결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협력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국제경제의 불안정 요인, 미국 신행정부 아·태 지역 전략의 불투명성, 북한 문제 등은 한·일 관계의 결속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미국의 아·태 지역 관여) 및 자유무역 체제에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국제 정세의 불투명성이 증가할 때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는바, 2017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해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국내 정치, 즉 탄핵 정국 하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대외관계의 장악력 약화 및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 연동에 따른 대일 정책의 재검

토 요구 증대 가능성은 한·일 관계의 이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5년 말에 타결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및 2016년 11월 말에 체결된 한·일 GSOMIA 등의 재검토 요구가 정치 쟁점화될 경우, 한·일 관계는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러시아

가. 정국 안정과 경제 여건 호전 속 차기 대선 관심 증대

2017년 러시아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경제 여건 호전 속에서 정국이 안정되고,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18일 실시된 국가두마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압승(헌법 수정도 가능한 450석 중 343석 차지), 푸틴 대통령에 대한 80% 내외의 지지, 의미 있는 야당 세력의 부재, 언론 통제 등에 힘입어 2017년에도 러시아 정국 안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2018년 3월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2017년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출마 여부와 정책 변화의 향배에 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3기 푸틴 정부 출범 후, 특히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세계의 대(對)러 제재 시작 후 두드러진 러시아 내 반(反)서구 민족주의 및 보수적 가치 중시 현상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제3기 정부 출범 후 정교회, 언론매체, 친(親)정부 단체 등을 동원해 보수주의 및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제3기 푸틴 정부는 반정부 및 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시민단체, 특히 외국의 지원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2월 1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서방세계의 간섭 배제, 러시아식 민주주의 발전 및 애국적 NGO 활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2017년에 대선 정국을 이용한 외국 NGO 및 정치세력의 내정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17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1% 내외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나, 인플레이 및 루블화 폭락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국민들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경제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금융 위기로 급속히 악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현대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4년 3월 발생한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돈바스(Donbass) 지역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원은 서방 세계의 대러 경제 제재를 확대·지속시켰고, 이는 유가 하락과 결합해 러시아 경제 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왔다. 2016년 들어 러시아 경제가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에 적응하면서 점차 호전되었으며, 그 결과 전년도의 -3.8%의 GDP 성장률보다 호전된 -0.6%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2015년 12.9%이던 인플레이션도 2016년에는 5.8%로 큰 폭 하락했으며, 2017년에는 4% 내외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2017년부터 GDP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대러 제재 완화의 정도, 유가, 경제개혁과 내·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 CIS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 및 ‘민스크 협정 II’ 이행 노력

2017년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공고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정 II’의 이행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2017년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의장국 수임을 활용해 EAEU의 제도화와 대외적 협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CIS 국가들과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월 출범한 EAEU는 일단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CIS 국가들의 경제통합체로 출범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회원국 간 높은 경제력 편차,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의 심각한 침체는 러시아에 많은 근로자를 파견해 외화벌이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EAEU 출범 전 상이한 관세 제도는 회원국 간 손익에 차이를 초래하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EAEU를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는 출범 2년 동안에 노정된 여러 문제의 해법을 강구하면서 2017년에는 블록 외 CIS 국가들은 물론 한국, 인도, 이집트 등 역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등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경제 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2014년 3월 이후 최악의 관계에 있으며, 2016년에도 정부 고위 인사들의 상호 비방, 30억 달러 차관 상환 문제, 가스 공급 대금 체납 문제, 크림반도 반환과 동부 분리주의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7년에도 '노르망디 포맷(Normandy format)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참여)을 활용해 러시아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수준에서 '민스크 협정 II'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리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지위 부여 및 사면 조치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정치권의 분열이 심각해 '민스크 협정 II'의 완전한 이행이 2017년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탈(脫)러 성향을 보이던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이 2016년 9월 급사(急死)한 후 친러 성향의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ayev) 대통령 대행이 12월 4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서 2017년 들어 러·우즈베키스탄 관계가 개선되고,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 러·미/러·EU 관계의 점진적 개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러·미 관계는 물론 러·EU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7년 중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러·미 관계는 제3기 푸틴 정부 출범 후 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 외 요인들이 상호작용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탈냉전기 최악의 관계에 빠졌다. 그런데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러 정책과 국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2017년 여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푸틴 대통령과의 상호 인식을 고려해 볼 때, 2017년도 양국 관계는 갈등보다는 협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격퇴와 반(反)테러 공조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스크협정 II’의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양국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간 군비경쟁과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한 외교·군사적 협의를 2016년보다 활성화할 것이며, 중단된 핵감축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17년도 러·EU 관계는 미국의 대러 정책과 유럽 내 정치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2016년에 대러 제재를 연장해 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르망디 포맷’을 중심으로 대러 협상을 지속하였다. 러시아는 EU의 대러 제재 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EU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등 맞제재를 지속하였다. 러시아와 EU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알레포(Aleppo) 공격에 따른 인명피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NATO에 대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EU의 대러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 단계에서 평가해 볼 때, 대러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의 대러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의 대선과 총선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치

지도자의 당선 가능성, 그리고 2016년 12월 실시된 불가리아와 몰도바 대선에서 친러 인사의 당선 등을 고려해 볼 때, 러·EU 관계 개선 가능성이 크다.

라. 아시아 중시 정책의 지속

러시아는 2017년에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및 극동개발을 위한 '신(新)동방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대중(對中) 접근 정책을 강화시켰으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공고화에 기여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 해군 훈련을 2015년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2016년 9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러시아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판결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러·중 양국은 2016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등 다자 국제회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였으며,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별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험 확대에 합의하였다. 2017년에도 양국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은 지난 수년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사업들의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G7 일원으로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던 러·일 관계는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적극적인 대러 관계 개선 정책에 힘입어 제반 분야에서 협력 확대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실제로 2016년 아베 총리는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의 60주년을 맞이해 쿠릴열도/북방 영토 문제의 해결 전기 마련, 대러 경제·에너지 협력 확대, 대러 관계 개선

을 통한 중국의 부상 견제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러 접근 외교를 적극 실천하였다. 아베 총리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9월 초에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한편 2016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방일(訪日)로 개최된 러·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러·일 양국은 2017년 이미 합의된 사항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는 인도와 BRICS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 확대시켜 오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SCO 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 2016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회원국 가입을 확정 지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러시아는 2017년 인도,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확대와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 대북 제재 지속 하에 남북협력 확대 모색

러시아는 2017년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한·러 양국 간 경험 확대를 위한 대한(對韓)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대북 물밑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일정 부분 옹호하는 '북한 끌어안기' 정책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양자 차원에서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한·러 정상회담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간 외교·경제 협력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으로 복원되길 희망하였다. 2016년 한·러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이해 제고 및 양자 협력의 재활성화를 추동했으며,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에 관한 이해 제고와 북핵 정책 공조를 강화시켰다. 또한, 양국 정상회담은 극동 지역에서 양국 간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러 양국은 2017년 중 한·EAEU FTA 협상을 본격화시키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러·미 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는 한·러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7년 한국과 러시아가 대선 정국에 돌입함에 따라서 양 정상 간 협력의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는 북한이 2016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단행하고, 20여 차례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러시아의 대북 협력 확대 정책을 제한시켰으며, 그 결과 러시아는 2014~2015년도와 다르게 낮은 수준의 대북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한국의 나진-하산 경협 프로젝트에의 참여 중단은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3각 경협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017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국제적 고립 심화와 경제여건 악화에 빠진 북한의 국제적 입지를 일정 부분 살려주면서 동북아 전략 환경 및 한·러/미·북 관계에서 발언권 제고를 위한 ‘북한 끌어안기’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Ⅳ장

주요 지역 정세



제Ⅳ장 | 주요 지역 정세



1. 동남아시아

가. 미국의 대(對)동남아 정책 변화에 따른 중·일 경쟁 가속화

동남아 지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신행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과 일본 간 지역패권 경쟁 양상은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동남아 지역의 주요 강대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방향이 될 것이나, 이 지역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트럼프 신행정부의 관심이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지역경제통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기는 할 것이나, 그 대신 미국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선별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입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은 2017년 하반기 트럼프 당선인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주도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직접 참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트럼프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는 달리 EAS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이

이 지역을 더 이상 중시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EAS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변화는 이 지역에서 미국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향후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축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감으로써, 지역 안정자 역할을 자처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ASEAN 국가들은 보다 중국에 경도된 외교노선을 견지해 나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반면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간 지역패권 경쟁양상은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2016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이 경쟁적으로 확대·강화됨으로써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경우, 예상되는 힘의 공백을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메우려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일본 간 지역패권 경쟁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대 강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강 국면 유지

2017년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 중국, ASEAN 모두 현재 상황의 급격한 변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면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7월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PCA 판결과 관련하여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압력과 비판을 우회해 나갈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통합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실패한 ASEAN도 이러한 난관을 우회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과 ASEAN은 2016년 9월 중·ASEAN 특별정상회의를 통하여 양측이 2017년 중반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의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키로 합의함으로써, 외교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ASEAN 내 남중국해 핵심 당사국인 필리핀의 경우도,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신정부 출범 후 중국과 동 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항행의 자유”라는 미국의 기본적인 국익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역내 안보문제 보다는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중국 수출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등 양국 간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이 현상타파를 위한 도발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일차적 관심사항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도 2016년 PCA 판결에 대한 외교적 부담과 ASEAN과 합의하여 2017년 중 COC의 기본 틀을 제시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는 만큼, 남중국해 문제를 가급적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인공섬 조성이나 과도한 군사시설 확충 등을 일정 수준에서 자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 RCEP 타결 가속화

향후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폐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추진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9월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아태지역 16개국(ASEAN 10개국, 한·중·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은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및 협상 가능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타결 짓자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중 RCEP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확실치 않다. 무엇보다도 일본, 호주, 한국 등 역내 선진국들은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반면, 인도 및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가급적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RCEP 보다는 미국 주도의 TPP 추진을 최우선시 했던 일본은 TPP가 무산된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대해 강한 정치적 유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최종적 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RCEP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라. 2017년 ASEAN 리더십의 불확실성 지속

지난 수년간 표출된 ASEAN 역내 리더십 약화 현상과 2017년 ASEAN 의장국인 필리핀 향후 행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2017년 ASEAN 운영에 있어 내재적 한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SEAN은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4개 핵심국가(core states)들이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역내 최대국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매년 교체되는 의장국의 역할도 역내 리더십에 중요한 변수이다.

그런데 현재 ASEAN은 이 모든 영역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2014년에 출범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는 경제회생, 구조개혁, 부패청산 등 산적한 국내문제 해결에 몰두하고 있는 관계로 과거와 같은 역내 주도국으로서 외교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의 프라윗 찬오차(Prayuth Chanocha) 군사정부는 미국 및 EU 등 서구국가들로부터 비판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사실상 고립되어 있다. 또한 2016년 10월 국왕서거와 2017년 말 민정이양을 앞두고 어려운 국내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나집 툰 라작(Najip Tun Razak)총리는 야권은 물론 집권당내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전 총리 지지 세력으로부터 국부펀드 원 말레이시아 개발(1MDB: 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관리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과 자금의 개인유용 혐의로 사임하라는 심각한 내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필리핀이 2017년 ASEAN 의장국이 될 예정인바, 2016년 6월 집권한 신임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노선과 행태는 극단적인 “예측불가성(unpredictability)”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필리핀 내 인권문제를 거론한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미국과 동맹관계 재조정을 추구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ASEAN 의장국으로서 향후 어떠한 외교행태를 보일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대체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역외 강대국들에 대해 ASEAN의 균형외교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특히 미국 등 일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과성 사안(happening)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태국 군사정권의 민정 이양 가능성과 반(反)쿠데타 세력의 반격 기회 모색

2017년 태국 정치의 최대 쟁점은 태국 사회 내 구(舊)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현 군사정권(Yellow Shirts)의 민정이양 여부인바, 향후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중심의 반쿠데타 세력(Red Shirts)은 민중세력을 규합하여 결정적인 반격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축출된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 간

계속되고 있는 태국 정치의 불안정 양상은 표면적으로는 반(反)탁신 대 친(親)탁신, 남부 대 북부, 도시 기득권 중상층 대 농촌 소외계층 간 갈등표출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왕정유지파와 공화파 간 대립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로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문민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애초 2015년 말까지 헌법을 개정하고 민정이양을 완료한다는 약속은 이미 깨어진바 있다. 이후 프라윗 장군 지도 하의 군사정부는 새로운 정치일정을 제시했는데, 2016년 8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2017년 중 총선을 통한 민정이양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계엄령 하 강압적 분위기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향후 군사 쿠데타를 합법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과 총리를 하원 다수당의 대표가 아닌 원외 사회적 명망가를 임명할 수 있는 문제조항 등이 포함된 극히 비민주적 헌법이라는데 있다. 이는 결국 향후 총선의 결과가 구(舊)기득권 세력에게 불리할 경우 언제라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으며, 현 군사정권의 총리직을 맡고 있는 프라윗 장군을 차기 총리로 추대하려는 정치적 기획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난 70여 년 간 장기 재임했던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국왕이 2016년 10월 타계함으로써, 태국 정치의 안정자(stabilizer)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수많은 기행과 비행 등 자질시비로 국민적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 왕세자가 2016년 12월 왕위를 승계하였다. 이는 태국 정치의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신임 와치랄롱꼰 국왕은 태군 군부 및 기득권 세력의 최대정적인 탁신 전 총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상되는 총선과 민정이양 과정에서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군부와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보를 보임으로써, 탁신주도의 민중세력과 연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와치랄롱꼰 국왕은 총선과 민정이양 과정에서 탁신과 다수 민중 편에

섬으로써, 불안한 왕위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부도 2017년 중 예정된 총선과 민정이양을 상당기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01년 총선을 통해 탁신이 총리가 된 이후 현재까지 탁신주도의 민중세력은 각종 선거에서 한 번도 패배한바 없으며, 공정한 선거라면 언제든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탁신 중심의 반쿠데타 세력은 민중세력을 규합하여 결정적인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 시기는 군사정부가 총선을 실시할 시점 전후로 보이는바, 이는 태국정치의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 말레이시아의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

2015년 초반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심각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나집 총리의 돈세탁 혐의는 2017년 말레이시아 정치의 최대 불안정 요인이 될 전망이다.

2015년부터 말레이시아의 야권 정치세력 및 사회 재야세력들은 집권당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을 탈당한 마하티르 전 총리와 합세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집 총리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나집 총리의 비리를 폭로하고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나집 총리의 돈세탁 혐의로 골드만삭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함으로써, 이 문제는 2017년에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등 해외 사법당국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중 나집 총리가 퇴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나집 총리는 장기 집권당 UMNO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나집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야권 정치세력들은 내부적으로 사분오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총선 이전에 분열된 야권의 전열이 정비되고 야권연합이 성사될 경우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집 총리와 집권당 UMNO는 정권 연장을 위해 2017년 중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을 시행할 수도 있다.

2. 서남아시아

가. 인도·중국 간 경쟁·대립 지속

2017년 인도는 역내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면서도,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복합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집권하면서 중국과 인도 관계 정상화 및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인도 간 국경분쟁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고, 중국 주도로 인도의 핵공급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가입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 또한, 인도·파키스탄 간 관계가 재경색된 상황에서 중국은 카슈미르 지역을 관통하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건설 사업을 통해 파키스탄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판결 이후 유엔해양법(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같은 국제 규범에 따르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현재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옵서버 국가인 중국의 대화 상대국 지위 격상 추진 등 서남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 노력을 적극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는 중국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 싱가포르

르 등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인도 간 정상회의,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협력기구(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메콩-갠지스협력(Mekong-Ganga Cooperation) 기구 등 다자협의체를 적극 활용 중이다.

다만, 유라시아의 양대 대국인 인도와 중국은 양국 간 국경 문제와 카슈미르 분쟁 등 파키스탄 관련 사안 등에 있어서 대립 관계를 지속하고, 인도 양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쟁하면서도 BRICS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호 협력을 지속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 중국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인도의 견제

2017년 중국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의 국가들을 통해 ‘신(新)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책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인도는 일본 및 미국 등과 함께 공동으로 중국 견제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신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파키스탄과 인도 동부의 콜카타 등을 경유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인도에서는 인도와 중국 간 갈등 관계로 인해 중국의 투자가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대(對)인도 투자액은 40억 달러 규모로서 다른 국가의 투자에 비해 매우 적은 형편이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음에 따라 2016년 11월 중국의 화물 운송을 목표로 한 과다르(Gwadar) 항구가 개통됐고, 2030년까지 중국이 CPEC를 통해 46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 지역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 국경 문제, CPEC에 따르는 중국의 카슈미르 투자 계획에 대한 인도의 강력한 반발, 파키스탄의 내정 불안 등 문제로 중국의 대(對)파키스탄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은 현재 스리랑카에 대해 콜롬보 포트 시티와 콜롬보 내 대형 컨테이너 항구 및 국제공항 개발 등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나, 스리랑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인도를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이격 및 인도와 접근을 추진하고 있어 스리랑카 내 중국과 인도 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향후 인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남아시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인도와 일본은 2015년 인도의 신칸센 도입 발표 및 벵골만에서 미국·인도·일본 간 말라바르 해상훈련 실시에 이어 2016년 11월에는 ‘인·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인도·미얀마·태국 간 고속도로 프로젝트에도 일본이 참여하는 등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공동의 견제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인도의 경제성장 유지 및 강대국 관계 강화

2017년 인도는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미국과 호주, 일본과의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의 서남아 진출 견제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2016년 8월 중국 외교부장의 인도 방문, 2016년 9월 항저우 G20 계기 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관계 강화도 모색해왔으며, 2016년 10월 인도의 BRICS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인도와 중국, 인도와 러시아 간 관계가 강화 지속 중이다.

2016년 주요 지방선거에서 모디 총리의 인도 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의 승리는, 향후 정국 안정 및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5개 주의회 선거에서 BJP가 계속 선전할 경우, 모디 총리의 연임 및 ‘Make in India’ 등 주요 개혁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2016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7.5~8.0%

수준으로, IMF는 7.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중국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라. 파키스탄의 정국 불안 가능성

파키스탄은 2017년 테러 척결을 위한 국가적 단결을 모색할 것이나, 국내 정국 불안정 요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은 2013년 총선 부정 의혹 관련, 2016년 7월 체계적 선거 조작이 없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테러 척결을 위한 국가적 단결 분위기가 지속 중이다.

파키스탄은 대(對)테러 국가 행동계획 하에 테러단체 및 잠재적 테러 혐의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부족자치지역(FATA: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대테러 군사작전, 테러단체의 보복테러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정보 작전 및 카라치 갱단 소탕작전 등을 실시함에 따라 치안 정세가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16년 4월 파나마 문건(Panama Paper) 유출 사태로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 자녀 3명의 역외 회사 설립 정황이 드러나 야당 측에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샤리프 총리의 사퇴 등 정국 불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마.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 요소 상존 하 재건 노력 지속

2017년 아프가니스탄은 재건 노력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탈레반 등의 교전단체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국제사회의 2017년 이후 대(對)아프가니스탄 지원 규모를 공약하는 2016년 하반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바르샤바 정상회의(7월) 및 브뤼셀 각료회의(10월)

시 부패 척결, 선거제도 개혁, 재정수입 증대, 군·경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실적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내 만연된 부패, 중앙·지방 정부의 역량 미비 등으로 인해 획기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군·경(약 35만 명)이 규모 면에서 탈레반(약 4~5만 명 추정)에 비해 월등히 많고 NATO군 및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파키스탄 테러집단의 지원 하에 소규모 게릴라식 공격을 감행하는 탈레반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중국·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간 4자 조정그룹 회의가 2016년 5차례 개최되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파키스탄에 대한 불신과 탈레반 지도부의 강경화 등으로 조속한 직접 대화 개최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할 수 있다.

3. 중앙아시아

가. 권위주의 정부 하 정국 안정 유지

권위주의적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시켜온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17년에도 정국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의 토대가 되는 현상들, 즉 집권 세력의 조직적인 야당 왜소화, 언론 통제, 시민사회의 미성숙, 권위 순응주의적인 정치문화 등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과 체제 내적 정체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사회 개혁을 부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6년 9월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12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ev)

총리가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사망으로 지난 25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은 종식되면서, 정치 엘리트들의 부분적인 교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임 대통령 때보다는 더욱 친(親)러시아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은 2017년에도 정국 안정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급사(急死)에 따른 학습효과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反)정부 데모가 일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정국 안정을 해칠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

키르기스스탄은 2015년 10월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ev)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승리를 거둬으로써 2016년 안정된 정국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친러 지향의 정당들이 대거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2017년에도 친러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w)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사회보장형 국내 정책, 언론 및 시민단체의 취약성 등 때문에 2017년에도 정국 안정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지키스탄은 2015년 발생한 파미르 고원 홍수, 지진, 유혈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정국 안정이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정국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역내 경제통합 심화와 경제위기 극복 노력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17년에도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통한 역내 국가들 간 경제통합 심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중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존 가입국들인 러시아·아르메니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간 EAEU 제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또한 각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서방 세계의 대(對)러 경제 제재 지속과 러시아 경제여건의 급속한 개선이 기대되지 않음을 고려해볼 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송금액 급감 등 러시아 경제 위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2017년에도 자구책 강구 차원에서 국내 경제 환경 개선, 러시아 외 중국, 인도 등 여타 국가들과의 경협 확대 등을 모색하겠지만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유가 하락과 고율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EAEU의 출범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2016년 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2.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들어 유가 및 원자재가의 상승 기조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부국들, 즉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중심으로 산업 및 에너지 수출선의 다변화 정책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나 가시적인 성과는 적을 전망이다.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과 갈등 양상 노정

2017년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테러, 영토, 이슬람 극단주의, 수자원, 환경, 핵무기 비확산 등 역내에 산적한 문제를 둘러싸고 협력과 갈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세력 확대,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등 이슬람 극단주의 유입과 이들의 테러 행위를 우려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등 다자 협력체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2017년에도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5년부터 군사적 비동맹 등 중립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들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등으로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의 침투 및 국경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서 안보위기 인식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 정책 기조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17년 러시아 등 접경국들과 안보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갈등 관계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전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지키스탄이 로군(Rogun)댐 건설을 통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본격 추진할 경우, 우즈베키스탄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역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중앙아시아의 수자원 문제는 상류 수원 국가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전력 부족을 이유로 수력발전소를 러시아의 도움으로 건설하면서 하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이 반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류 국가로서 면화 생산을 위한 관개용수와 식수가 가장 많이 필요한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에 반발이 지속될 것이다.

라. 역외 주요 국가들 간 세력경쟁 지속

역외 주요국들 세력경쟁(New Great Game)의 장으로 변한 중앙아시아에서 역내외 국가들 간 협력과 경쟁의 양태는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신임 대통령의 친러 성향은 역내 역학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15년 1월 관세동맹을 EAEU로 전환시켰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여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가입 추진 등 친(親)서방 정책을 제어했던 사례와 같이 러시아는 CIS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7년에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EAEU와의 경협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15년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과 실크로드기금(Silk Road Fund)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에너지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은 2017년에도 러시아와 함께 주도하고 있는 SCO와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등 다자 협력체를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은 물론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은 SCO 국가들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BRICS와 더불어 신흥국 협력체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향후 ‘서방세계 대(對) 신흥국’ 국제질서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쌓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17년에도 반(反)테러, 반(反)종교적 극단주의 등은 물론 경제·에너지 분야에서 SCO 차원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對美) 견제 및 도널드 트럼프

프(Donald Trump) 실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적 외교 정책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친러 정부 출범은 미국의 대(對)중앙아 접근 정책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발전 지원 및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등을 채택해 제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EU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7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밖에 인도와 터키도 2017년에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차원은 물론 다자 차원의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마. 한·중앙아 협력 지속 및 확대 모색

2017년 상반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은 외교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제반 분야에서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 확대 이행을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전략적, 경제적, 민족적으로 의미가 큰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이들 양국을 중심으로 정상 방문 외교를 추진해 왔으며,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14년에는 우리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함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협 확대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2015년 4월 대구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물 포럼’ 시 서울을 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그동안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에 있던 양국간 협력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에너지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협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2017년에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2015년 1월에 출범한 EAEU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EAEU와

다자 차원에서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2017년에는 EAEU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양국 간 외교·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2017년에는 정상회담 시 합의했던 협력 사업들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편 서방 세계의 대리 제재 및 유가·원자재가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경협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지만,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중동

가. 정부군의 우위 예상 속 시리아 내전의 격화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신행정부는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독재정권의 퇴진보다는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격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되는데, 시리아 내전 상황은 쉽게 안정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시리아 내전은 2017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러시아 및 이란의 지원, 헤즈볼라(Hezbollah)의 참전 등으로 아사드 정부는 정권 존속 기반을 다진 반면, 반군 진영은 극단주의와 온건 진영으로 분열됨으로써 효율적인 반정부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미 대선 변수로 인해 향후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존속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사드 독재정권의 퇴진보다는 ISIL 격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급진 이슬람 과격 세력에 대한 우려를 반(反)무슬림 정서와 연결하면서 선거전을 이끌었다. 따라서 ISIL과 싸우고 있는 아사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신 대(對)테러전에 집중, ISIL 공격 수위를 높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거점을 옮기는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과의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군의 합동작전으로 반군 저항세력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극단주의뿐만 아니라 온건 반군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며 자칫 민간인이 대량으로 살상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하여 대외 개입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사드 존속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중동 지역 내 영향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나. ISIL의 위축·교착 및 테러의 확산 가능성

국제사회의 거점 집중 타격으로 세력이 약화된 ISIL은 2017년 자신들의 위축세를 만회하기 위해 테러 확산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 테러집단인 ISIL은 국제사회의 거점 집중 타격으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이라크 지역 전선에서 ISIL의 타격이 컸다. 이라크 정부군은 시아파 민병대와 함께 남부 라마디(Ramadi) 및 중부 팔루자(Falluja)를 탈환하고, 2016년 말 현재 이라크 내 ISIL 최대 거점인 모술(Mosul) 진공을 추진 중이다.

ISIL의 세력 약화는 국제사회의 대테러전 완승이 아닌 관계로, 2017년에는 오히려 이라크 지역에서의 ISIL의 위축으로 인해 테러 지도부는 시리아로 거점을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이라크 전선에서 후퇴하여 시리아 라까(Raqqah)를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곧 시리아 내전의 격화 및 지속을 의미한다.

더욱 우려할만한 사안은 이러한 위축과 교착 국면에 접어든 ISIL 지도부가 자신들의 위축세를 만회하기 위해 테러의 확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존재감의 거양(擧揚)’과 ‘공포의 확산’이라는 양대 목표 달성을 위해 테러집단은 이제는 본격적인 외연 확대(outreach)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년에는 ISIL 세력들이 중동 지역을 벗어나 다양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소프트 타겟(soft target)에 대한 무차별 테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슬림 마이너리티 공동체가 산재하는 파리 외곽과 브뤼셀 등 유럽 대도시 주변과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는 미국 내 주요 도시 등은 위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란핵 협상을 둘러싼 논란의 재점화 가능성

2017년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란 핵 협상에 대한 구체적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7월 14일 비엔나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이 이란과 타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첫 관문인 이란 내 핵 관련 군사시설(PMD: Possible Military Dimension) 사찰을 무사히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란 핵과 관련하여 부과되었던 유엔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미국의 대(對)이란 3중 제재 해제가 이행되었다.

일단 제재 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예정대로 시작되고 구체적인 대이란 투자 타진이 시작되면서 이란 경제의 활황이 예견되었다.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이 적극적인 경제 외교 행보에 나서 동결되었던 이란의 해외 자산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와 항공기 대량 발주 계획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이란 경제 개방 징후가 보였다.

문제는 미국이 여전히 이란에 대한 미사일 제재 등을 유지하고 있기에 외환 결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이란핵 협상 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가능성은 적지만 ‘제재 복원(snap back)’ 우려까지 더해졌다. 따라서 해외 주요 은행들은 자칫 제재 복원시 이란과의 금융거래로 인한 손실을 볼까 우려하여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작동하면서 이란 경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장 발판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란핵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의 무효화를 선언하거나 제재 복원에 돌입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단 협상 주체였던 P5+1/E3+3 중 유럽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여하한 경우에도 이란의 협정 위반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란과 계속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기업들 역시 이란의 성장 가능성과 진출 기회에 관심이 많기에 유럽 기업의 이란 시장 선점(先占)에 대한 우려 요인이 상존한다.

따라서 2017년에는 미국이 먼저 판을 깨면서 과거 제재 국면으로 회귀하기보다는 이란 내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몇 가지 조항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일정 정도의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화당은 공식적으로 이란핵 협상 자체에 반대해왔기에 당과의 의견 조율에 따라 재협상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라. 걸프 왕정국가의 위기 가능성 점증

2017년 걸프협력기구(GCC: Gulf Cooperation Council)에 속한 걸프 왕정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급변하는 역내외 질서 속에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걸프 지역의 최대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전 방위적으로 위기에 노출되었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국제 저유가 기조로 인한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 걸프 왕정국가의 재정 압박이 심해졌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채 발행 및 최대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의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야 할 만큼 어렵다.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내부의 권력승계 문제 역시 여전히 논란거리다. 한동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Saud) 국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국방장관과 경제개발위원장을 맡으며 왕실 내 실권을 획득하는 듯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

는 최근 지도력을 의심받고 있다. 예멘 전쟁의 실패와 지지부진한 경제 구조개혁으로 인한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반면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Muhammad bin Nayef)의 입지가 다시 강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왕실 내부의 승계 문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내연(內燃) 요인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술탄 까부스(Sultan Qaboos) 국왕이 연로한 오만(Oman) 외 여타 왕정 국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승계 논란은 크게 부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및 걸프 왕정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 혁명의 여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북쪽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ISIL로부터의 위협이 급등하고 있다. 걸프 건너편의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 지으며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 진입하는 데에 대한 공포감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신행정부의 미국내 셰일가스(Shale gas) 개발 확대 계획, 석유수출국기구 간 입장 차이 및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저유가 기조 역시 걸프 산유국에겐 중대한 위기 요인이다.

유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CC 내부의 이해관계와 대외전략에서도 사안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IL의 발호, 이란 영향력의 증대 등 현재 상황이 더욱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경우, 결국 가장 동질적인 그룹인 걸프 왕정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연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GCC 내부 역학관계에서 평상시에는 원심력이, 위기 시에는 구심력이 강하게 작동하며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 이·팔 갈등의 심화와 ‘2국가 방안’의 무력화

2017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트럼프 실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친(親)이스라엘 정책 기조가 예상되는바, 그동안 최종 결론으로 추구해 온 ‘2국가 방안(two state solution)’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실행정부의 대(對)중동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변화는 친(親)이스라엘 정책 기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걸프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 및 터키의 권위주의화 등의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중동 지역 내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안보의 협력 축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비록 선거기간 중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연사가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나오긴 했다. 그러나 이는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성향의 유대인에 대한 불만이었다. 따라서 2017년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현 이스라엘 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실행정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공세적 자국 우선주의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현재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법안(Jerusalem Embassy Act of 1995)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정착촌의 확대 추진을 천명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변화와 맞물려 아랍권 전역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강력한 투쟁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자 지구에 고립되어 있는 하마스는 투쟁 동력을 확보, 이스라엘 북부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 내 테러를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갈등의 가시화 및 심화는 필연적으로 ‘2국가 방안’의 무력화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5. 유럽

가. 영국의 EU 탈퇴 협상 과정의 난관 예상

2017년 영국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탈퇴 협상 과정은 영국 사회 내 지속적인 갈등, 동 이슈 관련 전문가 부족 및 주변국들의 견제로 난관이 예상된다.

2016년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됨으로써 영국·EU 간 관계 재설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럽 경제의 불안정성 요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2017년 유럽을 격동시킬 전망이다.

국민투표 직후 사임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를 뒤를 이은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2016년 가을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 즉 2017년 3월 말경 회원국의 탈퇴 의사를 EU에 통보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 후 영·EU 간 관계 재설정에 관련한 문제가 영국 정부 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 영국은 지속적인 내부적 혼란과 분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EU 잔류/탈퇴 국민투표에서 표출된 반(反)이민정서와 반(反)세계화 기류의 극복 문제와 더불어, EU 탈퇴에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2017년 영국 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브렉시트(Brexit) 투표 결과 발표 후, 일반 대중과 보수당 정권 및 노동당의 무력함에 대해 실망한 친(親)EU 엘리트층과 관련, 이들이 향후 EU 탈퇴 협상을 이끌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EU 탈퇴 과정 간 영국 의회, 재계, 학계, 관료 사회 내 지속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3년간 EU를 통해 통상 정책을 펼쳐온 영국은 2017년 EU 탈퇴 협상이 본격화될 시, 영·EU 양자 통상 협정, 현존하는 EU·역외국 통상 협정의 영국 적용, 새로운 역외국과의 통상 관계 설정,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내 새로운 최혜국 대우 관세 설정 등 다수의 통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3년간의 공백으로 인해 영국 정부 내 통

상·EU 전문가가 극히 부족하여 인력 확보부터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2017년에 EU 탈퇴에 관련된 전반적 통상 문제에 대한 전략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G20이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영국 및 EU에 서한을 보내는 등 각국은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 안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영·EU 경제통합 유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민자 통제를 주장하는 현 영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EU 탈퇴 후 영·EU 간 경제 관계의 청사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17년 영국 경제는 지속적인 예측 불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2017년 영국이 정식으로 탈퇴 입장을 밝히고 나면, 독일과 프랑스 등 EU 주요국들은 또 다른 회원국의 EU 탈퇴 움직임을 막기 위해 EU 회의론자(懷疑論者)들이 지지할만한 영·EU 관계를 최대한 거부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은 4월 네덜란드 총선, 4월·5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 등 유럽의 정치 일정이 매우 복잡한 해로서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국내 정치에서 EU 회의주의(懷疑主義)의 부상을 막기 위해 영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나. EU의 안보 분야 통합 진전 시도

2017년 EU 및 유럽 각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차원에서 영국의 EU 탈퇴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안보 분야의 통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영국의 EU 탈퇴가 가시화되면서, 2017년 EU는 그간 영국의 반대로 통합이 어려웠던 분야에서 통합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 직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EU, NATO 등 직·간접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이후 유럽의 대외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참여해야 하는 행위자들은 공통적으로 영국의 EU 탈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현재 수준의 협력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먼저 EU 차원에서 2016년 6월 28일 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고위대표는 'EU의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면서, 영국의 EU 탈퇴 투표에도 불구하고 유럽 안보와 국제 안보에서 EU가 역할을 확대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유럽 통합의 두 축인 프랑스와 독일은 2016년 6월 27일 양국 외교 장관의 공동성명을 통해 EU 차원의 안보 분야 통합 진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동 공동성명은 '유럽 안보 협정(European Security Compact)'을 제안하면서, EU 차원의 군사 역량 강화를 방산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차원의 안보 대화를 심화하고 EU가 근접 지역을 포함한 역외 지역에서 위기관리 활동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테러 위협과 관련된 지역에서의 안정화 작업에 있어 양국이 공동으로 앞장설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2017년은 이러한 2016년의 제안들의 실현 가능성과 실현 방법을 타진하는 첫해가 될 것이다.

한편, 독일은 2016년 7월 13일 발표된 '독일 안보 정책과 독일군의 미래 백서'에서 EU 자체 역량 강화, EU·NATO 간 협력 공고화, NATO 내 유럽의 역량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역할이 "중앙에서의 지도력(leadership from the centre)"임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안보 협력에서 책임을 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고 천명하였다. 동 백서는 자국의 변화된 위상과 다양화되고 고조된 유럽의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방법을 밝혔다는 점에서 독일의 유럽 안보 협력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백서는 독일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연립정부 하에서 작성되었으므로, 2017년 총선 이후에도 독일이 지속적으로 이 백서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7월 8~9일간 개최된 폴란드 바르샤바 NATO 정상회의 결과에서도 EU·NATO 간 협력을 강조하는 'EU·NATO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영국의 EU 탈퇴가 유럽 안보에 미칠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 공동성명은 EU와 NATO의 역량 강화가 양자의 공동 목

표이고 EU·NATO 간 작전상 협력이 확대 및 재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EU·NATO 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2016년 12월까지 작성할 것을 공표하였다. 그러므로 2017년은 영국의 EU 탈퇴를 대비하는 유럽 안보의 밑그림을 그리는 해가 될 것이다.

이상의 유럽의 안보 분야 협력 강화 시도는 선거 운동 과정 중에 NATO 무용론을 언급한 트럼프 후보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유럽은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군사역량 확대 압력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받게 될 것이다. 또한,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의 발전이 영국과 프랑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프랑스 대선 및 독일 총선 후 출범하는 양국 신정부 간 유럽의 안보 협력이 그간의 프랑스-영국 협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국의 탈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전히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복지 예산 등의 삭감 없이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기 어려우며, 이는 유럽의 방위 능력 강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 각국 선거에서 반이민 정서 부각과 주류 정당들의 고전 예상

2017년 반이민 및 반세계화를 표방하는 유럽 내 극단주의 정당들이 세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류 정당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2016년 유럽의 국민투표와 선거는 유권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표출의 장이 되었다. 4월 네덜란드에서는 EU·우크라이나 제휴 협정의 비준과 관련해 시민제안에 의한 자문적 성격의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동 투표는 네덜란드의 반(反)EU 극단주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제휴 협정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을 벌여 국민투표 실시 요건에 해당되는 30만 명 이상의 서명

을 받음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등 투표에서 32%의 투표율에 61%가 협정을 반대함에 따라, EU의 우크라이나 포용 정책에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6월에 치러진 영국의 EU 잔류/탈퇴 국민투표에서는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dence Party)이 EU 통합 회의론을 주도하면서 반이민, 반세계화, 전문가 불신 등의 정서를 자극하며, 72%의 투표율에 51.9%의 탈퇴 지지라는 결과로 영국의 EU 탈퇴를 관철시켰다.

10월에는 헝가리에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 주도로 실시된 EU 난민 할당제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98.3%가 난민 할당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비록 투표율이 42.7%에 그쳐 국민투표 유효 기준인 투표율 50%에 못 미치는 하였으나, 현 정부가 난민 할당제에 반대하여 본 투표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난민 문제에 관한 EU의 난관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2월 4일에는 이탈리아에서 상원 규모 및 권한 축소 등의 정치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치러졌으나, 개헌이 부결되어 이에 책임을 지고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총리가 사임하였다. 또한, 개헌 부결을 이끈 포폴리즘 정당인 오성운동(M5S: Movement 5 Star; Five Star Movement)과 반이민과 반EU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인 북부리그(Northern League)가 2017년 초 조기 총선과 유로존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자국뿐만 아니라 유로존에도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2017년에도 각국의 국민투표로 인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16년 말 난관 끝에 서명된 EU와 캐나다 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이 2017년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라는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EU·우크라이나 제휴 협정’ 관련 국민투표와 유사하게 의회가 EU·캐나다 간 CETA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청

원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와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독립 국민투표 요구 등 중앙 정부와 갈등하는 지방의 분리주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조기 총선의 실시 여부와 결과에 따라 유로존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다.

2017년 각국 선거에서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더욱 그 세가 확장된 반이민 정서가 극단주의 정당을 넘어 포퓰리즘 정당과 주류 정당 일부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의 네덜란드 총선을 비롯하여 4월과 5월에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 9월의 독일 총선 등 각국 선거에서 이주자 통제와 난민 대응을 중심으로 한 이민 정책이 핵심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월과 5월에 걸쳐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은 경우, 주류 우파 정당인 공화당(Rеспублиcans)의 프랑수아 피용(Francois Fillon)이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의 마린 르 펜(Marine Le Pen)과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용의 승리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표차가 적을 경우 극단주의 정당은 여전히 프랑스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용의 강력한 이민 통제 선호나 친(親)러시아 성향 등은 대통령 당선 후 프랑스를 넘어 EU에서도 주류 정당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극단주의 정당의 정책을 일부 흡수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2016년 말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4선 도전을 선언한 독일에서는 2017년 9월 총선 결과가 현재와 같은 기민/기사당과 사민당 간의 연립정부를 도출할 것이 유력하나, 반이민을 표방하는 독일대안당(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 얼마나 득표할 것인지가 향후 독일의 이민 정책과 난민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6. 아프리카

가. 심각한 폭력사태의 지속

2017년에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종족 및 종교 간 분쟁, 테러, 반(反)정부 시위의 무력진압과 같은 심각한 폭력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는 종족, 종교 간 갈등의 폭력적 표출은 종족들 사이의 신뢰를 손상시켜,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줄일 것이다. 아프리카 일부 무장 조직들은 영토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테러 공격의 빈도를 늘리고, 이웃 국가들로 활동 영역을 넓힐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일반 국민들과 장기집권을 시도하는 지도자들의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2016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등에서는 종족·종교 간 분쟁이 계속 발생하였다. 남수단 딩카(Dinka)족 정부와 누에르(Nuer)족 반군은 2015년 8월 국제사회의 중재로 체결된 평화협정을 깨고, 교전을 재개하였다. 이들은 국제사회로부터 대량학살, 강간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포스탱 아르상취 투아데라(Faustin-Archange Touadéra)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독교도인 안티-발라카(anti-Balaka) 세력과 이슬람교도인 구(舊)셀레카(ex-Seleka) 세력 간의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말리에서는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안사르 딘(Ansar Dine)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이 정부군과 유엔평화유지군을 상대로 공격을 자행하였다.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Boko Haram), 소말리아의 알-샤바브(Al-Shabaab)은 정부와 이웃 국가들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영토를 상실하고 세력이 약해졌다. 하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국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서도 민간인 대상 테러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보코 하람은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차드, 카메룬, 니제르와 같은 이웃 국가들에서도 테러 공격을 전개하였

다. 알-샤밥은 소말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이웃 국가 케냐에서 여러 건의 폭탄 공격을 자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조직들이 서아프리카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AQIM과 알-무라비툼(Al-Mourabitoun)이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Ouagadougou)의 호텔과 카페, 3월에는 코트디부아르의 해안도시인 그랑 바삼(Grand-Bassam) 해변과 호텔들을 공격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서아프리카 국가들도 테러 단체들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부룬디, 에티오피아 등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폭력사태로 발전하였다. 부룬디에서는 피에르 은쿠룬지자(Pierre Nkrunziza) 대통령의 3선 이후 반정부 세력과 정부군 간 충돌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430명 이상의 부룬디 국민들이 죽고, 23만 명 이상이 이웃 국가로 피신하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오로미아(Oromia) 지역 개발 문제로 촉발된 오로모(Oromo)족에 의한 반정부 시위가 오로미아와 암하라(Amhara) 전 지역으로 번졌고, 정부는 이에 대해 무력진압을 시도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에티오피아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이후 약 1,600명의 반정부 인사들이 체포, 감금되었다.

2017년에는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등에서 종족 및 종교 간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반정부 투쟁이 부룬디에서는 후투족과 투치족 간, 에티오피아에서는 티그레이(Tigray)족과 오로모족, 암하라족 간 종족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알카에다 연관 테러 단체들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테러 공격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 에티오피아군의 소말리아 철수로 인해 알-샤밥의 활동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한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정부와 야당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모잠비크 등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선거 과정에서의 불안정 야기 우려

2017년에도 다수 국가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는바, 이 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 다툼 및 무력 충돌이 점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앙골라, 케냐, 르완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는 총선이, 그리고 차드, 콩고공화국(Republic of the Congo),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에서는 의회 선거가 벌어질 예정이다. 세네갈과 같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가는 나라들에서는 선거가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다. 반면에 우간다, 차드 등의 선거는 자율성과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선거 연기와 케냐의 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폭력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앙골라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 갈등이 전개될 전망이다.

201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베냉, 가봉, 콩고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냉, 카보베르데 등에서는 선거가 비교적 잡음 없이 잘 치러졌다. 8월에 실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는 넬슨 만델라 베이(Nelson Mandela Bay), 요하네스버그 등 주요 도시에서 야당에 패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ANC의 경제 실정과 부패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몇몇 국가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간다에서는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현 대통령이 야당 후보인 키자 베시게(Kizza Besigye)를 가택 연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야당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탄압한 끝에 총선에서 승리했다. 가봉에서는 야당 후보인 장 핑(Jean Ping)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알리 봉고(Ali Bongo) 현 대통령의 승리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야당 지지자들의 시위로 수십 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일부 지도자들이 선거를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의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계속 연기하면서, 반정부 시위대와 정부와의 충돌이 격화되었다.

2017년 아프리카 대륙에서 앙골라와 케냐의 선거가 주목을 끌고 있다. 앙골라에서는 1979년부터 정권을 잡고 있는 조제 에두아르두 두스산투스(José Eduardo dos Santos) 대통령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집권당인 앙골라해방인민운동(MPLA: Popular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은 국방장관인 조앙 루렌소(João Lourenço)를 대선 후보로 추대했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에 의해 집권당 내 권력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케냐에서는 현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가 부정선거를 시도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이 야당의 불만을 초래한다면, 2008년 선거 후 폭력사태와 같은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콩고공화국에서는 총선이 계속 연기되면서,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탄압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 자원 생산 국가들의 경제 회복 및 성장 예상

2017년 국제 유가 및 광물 가격 상승에 힘입어 자원 생산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 및 성장이 예상되는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바닥을 쳤던 국제 유가와 광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자원 생산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광물 가격 상승과 제조업의 회복으로 경제침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석유 생산 국가들과 잠비아, 콩고민주공

화국 등 광물 생산 국가들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른 자원 생산 국가들에 비해 산업이 다양화되어 있지만, 광물 가격 하락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등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6% 이상 경제가 성장하였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가 농업 부문의 발전,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으로 인해 6%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가나는 수출 자원의 가격 하락,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진출은 2016년에도 계속되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원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과 직접투자가 40% 이상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 개발과 수출이 줄어들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활동을 축소하면서 인프라 건설이 지체되고, 지역민들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구 국가들, 인도, 일본, 브라질, 한국 등과 무역을 증진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국가들 간 무역과 투자도 늘고 있다. 이 두 가지 노력은 중국 경제 악화의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2017년 나이지리아,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원 생산국들의 경제는 자원 가격의 반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과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는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라.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고려 또는 추진 예상

2017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인종차별적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 'ICC 규정'을 탈퇴하려는 국가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ICC 규정' 탈퇴 증가와 관련해, 여러 지도자들은 ICC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만을 다루는 인종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와 더불어 ICC에 의해 기소된 외국 정부 지도자에 대한 체포 의무는 현직 지도자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법과 상충된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ICC 탈퇴를 고려하거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감비아는 'ICC 규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케냐, 콩고공화국, 나미비아 등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02년 창설 이후 ICC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 중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현재 수단,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리비아, 말리, 우간다에서 발생했던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심각한 인권유린을 조사하고 있다. 기소된 39명 모두 아프리카 출신이며, 현직 국가수반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대통령이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등으로 기소되어 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ICC가 아프리카를 겨냥해 이 지역 인권 유린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식민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한, ICC가 비(非)아프리카 지역 인권침해 문제들(예: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체제 종식 이후 아프리카에서 인권의 선진국이라 불리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탈퇴는 대내외적으로 충격파를 던졌다.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정상회의의 참석 차 자국을 방문하였을 때, ICC의 체포 요구를 현직 정부 수반에 대한 면책특권을 내세워 거부하였다. 아

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면서, 흑인 정부 등장 이후 진전된 국제 인권에 대한 관심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탈퇴 선언을 계기로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ICC 규정’ 탈퇴를 고려하거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는 자국 대통령, 부통령의 기소 이후 ICC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ICC 규정’ 탈퇴를 시도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지역 강국들의 탈퇴는 ‘ICC 규정’에 가입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퇴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중남미

가. 실용주의 우파 정부의 확산 하 여소야대/분점정부의 한계 노정

2017년 중남미 정치의 우경화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여소야대/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한계로 우파 정부의 개혁 동력은 약할 것이며, 이념보다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발생한 주요 정치사건의 공통된 현상은 경기둔화, 그리고 실정과 정부의 잇따른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좌파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탈(脫)이념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우파가 득세하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8월 중남미 좌파연대의 리더 역할을 해 왔던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 역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중남미 좌파 진영의 리더십 공백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강경 좌파로 분류되는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의 4선 연임 좌절과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의 2017년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역내 강경 좌파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집권에 성공한 우파 정부들도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하였고, 집권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적 기반과 조직이 취약한 집권당 공화주의제안당(PRO: Propuesta Republicana)은 표를 의식하여 사회적 비용이 큰 개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브라질 역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연립정권의 분열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고, 최근에는 미세우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소수 여당이 구조 조정과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 소폭의 경제 회복세 기대

2017년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투자가 살아나면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중남미 경제는 국제 원자재가 하락과 중국 경제의 저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0.9%의 성장에 그쳤다. 특히 역내 GDP의 52%를 차지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마이너스 성장이 중남미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하락시켰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ndel Sur) 국가군의 침체,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 국가군의 약진 그리고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선전이라는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2017년 중남미 경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통화긴축 정책,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의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그리고 중국 경제의 성장방식 전환에 따른 국제 원자재 수요의 부진으로 세계 교역의 위축과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러나 원자재 시장의 소폭 반등과 외국인 투자 유입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에 힘입어 2017년부터는 경

제 회복세가 조금씩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최근 달러화 강세가 일단락되면서 현지통화 압력이 약화되었고 상품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 하에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상하였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MERCOSUR 국가들과 PA 국가들 간의 성장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파나마,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등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반사이익이 큰 중미 국가들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자원 수출국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페루 등에서의 경제 회복세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유가 압력으로 멕시코는 정체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각각 -3.2%와 -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중남미 경제침체를 주도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우파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구조조정, 긴축 정책, 민간투자 확대, 자유무역 등 정통주의 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물가 상승, 실업률, 그리고 빈곤율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과 사회적 저항이 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혁 정책은 1990년대의 급진적인 형태가 아닌 사회적 통합을 염두에 둔 점진적이고 완만한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에서는 당분간 금리 인상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시중에 풀린 화폐를 흡수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부족을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와 국제무역 활성화를 경제침체 탈출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주된 통상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 MERCOSUR는 원칙적으로 양자 간 FTA를 금지하고 있으나, 브라질을 중심으로 규정을 바꿔서라도 양자

간 FTA를 허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미 중국, 일본, 미국, PA 국가들이 MERCOSUR 국가들과의 양자 FTA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17년에는 MERCOSUR의 운영방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특히 멕시코 및 중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국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탈퇴가 중남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겠지만, 세계 교역 감소, 소비 위축,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중남미 실물경기의 침체와 외국인 투자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반(反)세계화의 확산은 FTA와 개방경제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파 정부들의 개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15년부터 협상이 재개된 EU·MERCOSUR FTA 협상은 그동안 협상에 우호적이었던 영국의 탈퇴로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EU와 FTA 협상을 체결한 중남미 26개국들은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후보의 대선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35%의 관세 부과, 미국내 불법 이민자 추방,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를 공언하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상 정책 개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이 노동, 환경, 환율

등의 불공정성을 이용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무역제한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미국은 멕시코 전체 수출의 75~85%, 그리고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무역 파트너이며, 멕시코 제1의 해외직접 투자자이자 고용 창출자이다. 따라서 미국이 근린 궁핍화 정책을 실행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멕시코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NAFTA 체결 이후 미국 및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섬유, 전자, 자동차 등 여러 제조업 분야와 직접투자에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거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취임 즉시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데 반해 NAFTA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에 트럼프 신행정부의 정책 윤곽이 뚜렷해질 때까지 기업들은 투자를 보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멕시코의 경제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세계화의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세계화의 흐름 자체를 바뀌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계 경제 변동에 민감한 중남미 국가들로서는 새로운 대안 모델 발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중남미 국가들의 손해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언한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시행될 경우, 멕시코와 중미,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손해가 예상된다.

멕시코에 위협이 되는 또 다른 미국 정책의 변화는 이민자 정책이다. 만약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여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는 공약이 실행된다면 중남미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 미국내 불법 이민자 수는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74%가 중남미 출신이고, 멕시코 출신은 53%이다. 미국의 중남미 노동자들이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한 해 650억 달러이며, 특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의 경우 송금이 전체 GDP의 평균 15%를 차지하므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라. 미국의 중남미 경시와 중국의 중남미 중시

2017년 미국과 중남미 관계는 트럼프 실행정부의 보호주의, 반(反)이민주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중남미에서의 힘의 공백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03~2013년 중남미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중국특수(China Boom)가 끝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당면한 중남미 각국에서는 그동안의 대(對)중국 관계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모색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발한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당선에 따른 선진국 경제의 보호무역주의로 중남미와 중국의 경제관계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중남미 교역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은 중남미 제2의 교역국으로서 중남미의 대중교역은 전체의 13.7% 그리고 중국의 대(對)중남미 교역은 8.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중남미 교역은 브라질, 칠레, 멕시코에 70%가 집중되어있다. 그동안 중국은 곡물, 광물 그리고 에너지 공급처와 제조업 상품의 시장으로서 중남미에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금융, 건설, 과학기술, 군사, 매체 등 다양한 부문으로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10억 달러에 달하는 해양경찰정과 전투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에 위성추적정거장건설권을 승인해 주었다. 이러한 관계는 현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정부하에서도 변동 없이 추진되고 있다.

2016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에콰도르와 칠레를 방문하고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이 벌써 시 주석의 3번째 중남미 순방으로 이미 10개국 이상을 방문하였다. 특히 중남미 방문에서 시 주석은 미국에 답을 쌓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과는 달리 중국-중남미 협력을 운명공동체의 배에 비유하면서 호혜에 입각한 장기적 발전을 기대한다고 하

였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으며, TPP 철폐로 새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한 PA국가들과 개방 경제로 전환한 MERCOSUR 국가들에게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다. 이미 코스타리카, 칠레, 페루는 중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가 중국과의 FTA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남미 중시입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중남미 경시입장과 대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 미·쿠바 관계의 불확실성 증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對)쿠바 강경 정책 발언으로 2017년 미·쿠바 관계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재수교 이전으로의 회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국가평의회 의장의 악수로 미국과 쿠바는 53년간 단절됐던 국교를 정상화하고, 각각의 수도에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2016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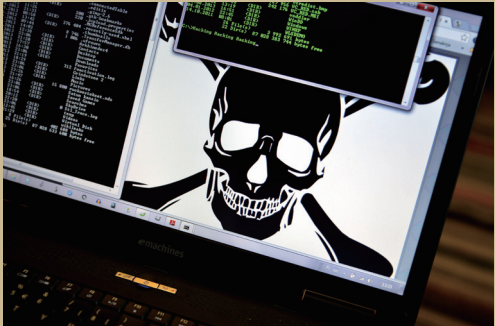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서 아바나(La Habana) 미 대사관 철수와 경제 제재 지속을 강조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데탕트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언을 했고, 이에 대해 쿠바는 트럼프 당선 직후 전략적 군사훈련인 ‘바스티온’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쿠바에 대해 종교적·정치적 자유의 보장과 정치범 석방을 외교관계 유지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쿠바는 미국이 쿠바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신행정부가 쿠바와의 관계를 재수교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서는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쿠바에 대한 중국, 러시아, 인도의 개입 증가에 따라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 콜롬비아 평화협정 타결과 정치적 갈등 지속

2016년 11월 25일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은 야당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평화 협정에 서명하였고 의회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10월, 52년간의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간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이 예상과 달리 최종 단계인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위기를 맞았다.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은 평화협정 자체보다는 내란 때 범죄를 저지른 반군에 대한 실행 면제와 관대한 처벌 그리고 합법적인 정계 진출을 보장한 평화협정 내용에 대한 표출이었다. 평화협정 이행을 조건으로 미국과 EU의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콜롬비아의 개혁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투표 부결 후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對)콜롬비아 정책을 계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이 약속한 4억 5천 만 달러 지원의 향방도 불확실해졌다. 국민투표가 부결된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 중단은 평화협정 타결의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국민투표가 평화협정 체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이번 평화 협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평화협정을 타결시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 자원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제V장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제V장 |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 국제 금융·통화

가. 미국의 국제 금융·통화 영향력 지속

2017년 금리 인상 지속과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의 국제 금융·통화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신행정부가 약속한 대로 인프라 건설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경기부양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면, 미국에서 2017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1%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은 2017년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으로부터의 글로벌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제는 최근 실질환율 변화가 주요 선진국 무역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만큼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5년 12월 미국 FR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의 0.2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여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 돌입하였

다. 당시 2016년에 추가로 금리를 4회 인상하여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2016년 초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폭락이 발생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저성장에 빠져있는 글로벌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국의 금리는 2016년 12월 15일에 단 한차례 0.75%로 인상되었다. 다른 한편, 2016년에 경제 호조 및 금리 인상 기대에 힘입어 미국 달러화는 25% 절상되었는데,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의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하여 다수 신흥국의 경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나. 중국 위안화의 약세

2017년에도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통화 바스켓 편입에 따른 중국의 기축통화 지위 획득에는 큰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의 약세도 전망된다.

2016년 국제 금융·통화 분야에서 큰 변화는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된 것이었다. 10월 1일부터 중국 위안화는 10.92%의 비중으로 미국 달러화, 유럽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와 함께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었다.

중국 위안화는 2016년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됨으로써 신뢰가 상승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였다.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미국 달러화와 유럽 유로화 외에 준비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긴 것이고, 중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 위안화를 보유할 인센티브가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안화의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은 환율 상승(절상) 기대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2016년에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10% 절하되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 외화보유액이 최근 6년 중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외화 유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에도 SDR 통화 바스켓 편입에 따른 위안화의 환율 상승과 기축 통화 지위 획득에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에는 위안화 환율 유지가 더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중국은 수출 촉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위안화 평가절하의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안화 평가절하는 국내 시장에서의 투매와 지역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전파를 통해 자신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신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정부는 환율 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중국인민은행(PBOC: People's Bank of China)이 환율 관리 기초를 유지할 경우, 위안화의 환율에서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켓에 대해 위안화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현물환율(spot rate)의 안정에 더 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선강통(深港通: 선전-홍콩 증시 연결) 또한 외국인들의 중국 금융시장 투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안화의 가치를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국이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획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율 결정 기제, 즉 시장 환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위안화 환율 결정에서 시장의 힘이 더 큰 역할을 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환율 중간값(mid-point rate)을 결정할 때 전날 오후 4시 30분 공식 시장 마감 환율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시장에서 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이 $\pm 2\%$ 거래 폭을 급작스럽게 철폐하고 환율시장 개입을 중단한다면, 위안화는 급격히 절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 신흥경제국의 부채와 금융 불안정성 증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2017년 주요 신흥경제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 불안정성도 심화될 전망이다.

2016년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대부분 개도국들은 성장 둔화세를 보였다. 세계 경제에서 무역이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흥경제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에서 브라질은 낮은 원자재 가격과 정치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러시아는 낮은 원유 가격과 국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중국은 수출 주도의 개발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2016년 신흥경제국의 성장 둔화는 부채 문제를 수반하였다. 2016년 초부터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非)금융권 민간 기업에의 대출은 GDP의 70%를 상회하였는바, 이들 국가에서 신용대출 증가는 외국 자본에 우호적인 금융환경과 선진국의 저금리와 관련이 있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해외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 목적으로 9.8조 달러가 유출되었고,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그 중 약 7조 달러가 신흥경제국으로 유입되었다고 추정한다. 전반적으로, 신흥경제국의 국내 수요 증가가 약화되어 지난 2년간 신흥경제국으로 자본 유입, 특히 포트폴리오 투자 자본의 유입은 감소해왔다. 그런데도 신흥경제국의 부채 축적 속도는 가속화되었고,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급격한 민간 신용대출의 증가가 경기침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전체 추세와 비교하여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3개 선진국과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고, 금융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을 포함하는 민간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는 GDP의 166%에 달하고, 저성장을 비롯한 몇몇 섹터에서 생산자 가격 하락과 과잉생산 속에서 민간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 상황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금융 안정성과 경제성장에 위협을 가할 정도이며, 이미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수익성을 잠식하는 비용 때문에 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2017년 신흥경제국 전반에서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미국 달러화는 많은 국가에서 기축통화로 쓰이는데, 기업

들은 미국 달러화로 자본을 조달하여 자국 통화로 투자한다.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인상과 연속적인 미국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기본적으로 달러화에 의존해 온 국가에는 타격이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달러 표시 해외부채 상환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신흥경제국에 주는 혜택은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부채 상환 부담의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물 분야에서 경기 침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경제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는 신흥경제국의 금융 여건도 악화시킬 것이며, 취약성이 누적된 신흥경제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신흥경제국은 자본 규제 조치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 조치 때문에 환율의 무질서한 평가 절하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라. IMF 개혁을 둘러싼 미·중 경쟁과 중국 주도의 AIIB의 부상

2017년 국제 금융·통화 분야에서 미·중 간 경쟁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확대를 둘러싸고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IMF의 거버넌스 개혁, 특히 신흥경제국의 발언권을 증가시키는 ‘제14차 일반 쿼터 검토(GRQ: General Review of Quotas)’가 2016년 초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제15차 GRQ’를 201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도 합의되었다.

2017년 국제 금융·통화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IMF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제15차 GRQ와 관련된 갈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제15차 GRQ는 새로운 쿼터 공식 수립, 쿼터 규모 및 배분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미 서방 선진국

들과 신흥경제국들이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일정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방어적인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은 2017년 3분기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18년 2분기에 제15차 GRQ 이행을 위한 주요 원칙을 작성하여 2019년 봄까지 합의를 달성할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신흥경제국들은 일정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제14차 GRQ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15차 GRQ를 실시할 당위성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현재의 쿼터 공식이 글로벌 경제 변화에 부합하도록 상당한 규모의 쿼터를 이미 신흥경제국들에 이동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반면에 신흥경제국들은 현재의 쿼터 공식이 회원국들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 실패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쿼터 검토의 결론을 내기에 앞서 쿼터 작업에 이용되는 IMF 쿼터 배정 투표권 그룹(Constituency)을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IMF 쿼터의 적정 규모와 배분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합의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 위안화의 약세와 외화 유출을 발생시키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국제 금융·통화 분야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인센티브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중국은 IMF 거버넌스 개혁에 더하여 AIIB를 확대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AIIB는 2013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에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국제 투자·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AIIB는 2016년 1월 16일부터 57개 창립 회원국을 가진 다자 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으로서 공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AIIB는 1,000억 달러의 기초 자본으로 에너지, 발전, 교통, 농촌 인프라, 환경보호 및 물류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2016년 6월에 AIIB는 첫 투자로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타지키스탄에서 전력, 주거 및 교통 4개 프로젝트에 총 5억 9백만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중국이 AIIB를 미국 주도의 IMF에 대항하는 국제금융기구로 확대하기 쉬운 방법은 회원국을 늘리는 것인바, 2016년 6월 제1차 연차총회에서 AIIB는 새로운 회원국을 승인하는 공식 절차를 발표하였다. AIIB는 이미 57개 창립 회원국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BRICS 국가들을 비롯한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서방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AIIB 가입은 세계은행(World Bank) 회원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회원국들에 개방되어 있다. AIIB 가입 희망국은 2016년 9월 30일까지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도록 요구되었다. 현재 미국의 의사에 반하여 캐나다가 회원 가입을 공식 신청한 상태인데, 캐나다가 가입하게 되면, 북미 대륙에서는 첫 번째 가입국이 될 것이다. 현재 20개국 이상이 AIIB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2017년 초반에 결정될 것이다. 이는 AIIB가 명칭과 달리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 통상

가. 다자 무역자유화 협상의 정체 지속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신행정부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국가들의 단일 통상 정책의 부재, 주요 신흥국 통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다자 무역자유화 협상의 표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6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무역 자유화 협상의 지속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착 국면이 지속된 상황에서 2017년 글로벌 통상질서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국내 정치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WTO 다자협상도 정체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6년 '나이로비 패키지'(농업 수출경쟁, 개발·최빈개도국, 규범 투명성 등 3개 부문)의 추가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2015년 12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각료회의(MC10: 10th Ministerial Conference) 이후 DDA 협상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심화된 바, 2016년 추가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은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다자간 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등 일부 쟁점 분야에서만 협상 타결이 가시화될 뿐,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WTO 제11차 각료회의(MC11: 11th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 타결의 동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상기 EPA, TISA 등은 기본적으로 WTO 회원국 중 참여 의사가 있는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복수국가 간 협상(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으나 미국 및 EU 등 주요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따른 협상의지 약화로 인해 최종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16년 12월 친환경 기술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EGA의 최종 타결 협상에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등 17개국이 참여하였으나, 참가국들 간 관심 품목 및 민감 품목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였다.

한편 복수국가협정으로 운영되었던 GPA의 경우, 중국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2017년 다자무역협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이 MC11 협상 전반의 레버리지로 GPA 협상을 연계할 경우, GPA의 다자무역협정으로의 전환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나. TPP 협정의 표류와 수정 가능성

트럼프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파기를 공식선언함에 따라 2017년에 발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TPP 발효가 장기적으로 표류될 경우 참여 국가들이 역외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나 한국 등 회원국 확대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TPP 협상은 2015년 10월 5일 타결됨에 따라 미국 등 12개 주요 참가국들이 2016년 이후 국내 비준절차를 가속화하고, 이러한 기조가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실제 TPP 발효에 적극적인 일본은 트럼프 당선인의 TPP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9일 참의원에서 TPP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TPP 참여국들도 TPP 발효에 여전히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TPP 탈퇴를 공언한 만큼 TPP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현재로서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TPP 발효에 전향적으로 입장변화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TPP의 미래는 첫째 미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타 회원국들 간 협정을 발효하는 경우, 둘째 시간을 두고 미국의 참여를 설득하는 경우, 셋째 TPP 발효를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 등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타 참여국들은 미국이 불참하더라도 TPP 발효 의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17년 발효를 목표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TPP 발효 요건이 6개국 이상 및 GDP 합계 85%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발효시키려면 해당 협정문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국이 불참할 경우 TPP의 의미는 상당히 반감되기 때문에 기타 회원국들은 2017년 국내비준절차 완료와 함께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트럼프 신행정부는 입장 변화의 명분으로 TPP 협정문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TPP가 미(未)발효된 상태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PP 발효가 장기적으로 표류할 경우 2017년 TPP 참여 국가들이 역외국가간 양자 FTA나 한국 등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EU, 한국 등이 TPP 개별 회원국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 중인 것과 맞물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역시 TPP의

전면적 파기를 고려함과 동시에 TPP 개별 회원국들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 중국의 RCEP 협상 타결 노력 하 자국 중심 FTA 추진 강화

2017년에는 TPP 발효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다자 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며, 중국은 TPP 및 RCEP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양자 FTA를 병행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라 16개 역내 참여국들은 현재 진행 중인 RCEP 협상을 2016년 완료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 간 이견으로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13개 협상 챕터 중 경제기술협력 분야에 대한 최초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7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제17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관련 시장접근 분야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RCEP은 TPP와는 달리 역내국가 간 관세인하와 시장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상 분야가 좁으며 국내 법제도 개정의 부담이 크지 않다. 따라서 RCEP 주요 회원국 간 민감 품목에 대한 이해가 조정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17년 상품분야에 대한 협상 타결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RCEP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TPP에 대항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TPP 발효가 장기적으로 표류할 경우 중국이나 일본이 일정한 속도조절을 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 경우 RCEP 협상 역시 2017년 타결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RCEP의 핵심 당사국인 인도가 협상 타결에 미온적인바, 인도의 입장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2017년 RCEP 협상의 가속화와 함께 TPP 및 RCEP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양자 FTA를 병행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은 TPP 회원국인 페루 및 칠레와의 FTA 확대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RCEP 협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동 협상을 촉진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RCEP 협상과 더불어 2017년 한·중·일 FTA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ASEAN과의 한·중·일 간 FTA 체결 경쟁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TPP와 RCEP의 연내 타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은 물론 미국, EU 역시 동아시아 국가와 양자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경향은 ASEAN과의 기존 FTA를 개선하거나 ASEAN 개별 국가와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양자 FTA 협상의 가속화 속 선택적인 보호주의 정책 강화

다자무역 협상과 TPP 등 거대 광역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2017년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한편 공세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주의 정책의 공식적 발표와 영국의 EU 탈퇴, WTO 다자협상의 지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지속 등에 따라 향후에도 다자무역 자유화 협상은 비관적으로 전망된다. 또한, TPP 발효 지체,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및 RCEP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역 무역 자유화 협상 역시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이 기존 거대 광역 FTA 내 주요 회원국과의 개별적인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 미국 트럼프 당선인은 TPP 폐기를 천명하면서 TPP 주요 국가들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회원국 및 ASEAN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

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 공화당 정부의 ‘경쟁적 자유화’ FTA 정책의 회귀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도 RCEP 협상과 병행하여 동아시아 역내 국가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 국가 전체 또는 개별 회원국과 FTA 협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EU 및 일본 역시 TTIP, TPP, RCEP 협상의 표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신규 FTA 및 기존 FTA를 확대·강화하는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통상 질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주요 국가들의 국내 정치경제적 이유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통상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중국, EU 등의 WTO 제소 양태가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국내 통상규범 및 제도도 더욱 엄격하게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신행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이러한 양상은 2017년에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자적 보호무역 조치는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EU의 전반적인 보호주의 조치들과 통상 분쟁 제소가 중국,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통상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국제법과 레짐

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지속과 협상의 모색

2017년에도 남중국해 및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 간의 분쟁은 지속될 것이며, 핵심 이슈에 관한 관련국들의 합의 등 극적인 돌파구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관련 중재재판에서 재판부는 구단선(九段線)을 비롯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 재판이 중국의 참여 없이 진행된 것이며 재판부 구성이 편파적이었다는 이유로 판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필리핀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과가 중국과 필리핀 간 협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입장을 바꾸어 중재재판 결과를 협상의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2016년 10월 중국 정부 또한 2012년 이후로 지배권을 행사해 오던 스카보리 암초(Scarborough Shoal) 지역에서 중국 순시선을 철수시키고 필리핀 어선의 동 해역에서의 조업을 허용함으로써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 관련 분쟁은 단기간에 포괄적인 해결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며 2017년에도 어족자원 및 해저광물의 개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인접국들은 계속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의 어업자원 관리 문제로, 베트남은 어업자원 관리 및 파라셀 군도 석유 시추 문제로 중국과 계속 대립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2002년 중국과 ASEAN이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규범지향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과열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관련국들은 2017년에도 과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모색의 연장선상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분쟁의 관리를 추구할 것이다. 다만 그 협의의 토대가 2016년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을 통해 명확한 의미를 드러낸 국제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6년 7월 남중국해 중재재판 직후 ASEAN에서는 공통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였지만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의 반대에 부딪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오히려 2016년 9월 7일 중국·ASEAN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고 중재재판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중재재판과는 별개로 당사국들 간의 직접적 대화와 협상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지만, 2017년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나. 사이버공간의 국제법 정립 논의에서 주도권 경쟁 심화

2017년에는 UN을 중심으로 미·서방과 중·러 간 사이버공간 상의 주요 국제법 쟁점, 테러리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사이버 분야에서 미·서방과 중·러 간의 입장 차이는 관련 국제규범의 확인, 해석, 창설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바, 2017년 양 진영 간 대립은 6월로 예정된 제5차 UN 정보안보 전문가그룹(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014~2015년 제4차 회의에서 양 진영은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 ‘사이버 공간에서 ICT 이용에 관한 국제법 적용 방법’과 ‘국가행위에 관한 자발적 규범’ 등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일련의 국제규범을 정립한 보고서를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제4차 회의에서 주권, 자위권, 대응조치, 국가책임, 상당주의 의무 등 주요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동 규범의 구체화 작업은 2016~2017년 제5차 회의로 미루어진 상황이었다. 즉 자위권, 대응조치를 보다 분명히 보고서에 명기하고자 하는 미·서방 측과 이에 반대하는 중·러 등 국가들 간 이견이 2017년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테러리즘, 인터넷 거버넌스, 데이터 관할권 등 신규 의제도 국제법과 국제규범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서방 측은 제4차 UN 전문가그룹(UNGG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보고서의 골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동 의제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동 의제의 포함 여부는 사이

버 거버넌스에 대한 양 블록 간 근본적인 견해 차이인바, 국제안보 차원에서 제한적인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포괄적인 국제규범을 창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중국 등은 공히 국가 책임과 관련한 상당주의 의무를 국제법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상당주의 의무의 적용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대다수 서방 및 선진 국가들은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2017년 보고서 채택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정할지가 주목된다.

2017년 제5차 UNGGE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사이버 분야에서 적용되는 국제법 및 규범 논의가 일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제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UN 및 글로벌 차원에서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국제조약의 창설이나 기구의 설립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양 진영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2017년 제5차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채택될 경우 국제규범의 보편화,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사이버 안보를 규율하는 조약 창설, 국제기구 설립 등 제도화 논의를 둘러싸고 양 진영 간 대립은 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우주를 규율하는 새로운 레짐의 형성 난망

2017년에도 UN 및 다자협의체를 중심으로 서방과 중·러 간 우주 규율에 관해서는 레짐 형성에 대한 논쟁만 이루어질 뿐 진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주도로 만들어진 ‘우주활동 행동규범(ICoC: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은 2017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의 우주 규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UN 총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UN 총회 산하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에서 활발

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의 중심에는 동 우주활동 행동규범이 위치하고 있다. 이 행동규범은 1)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가의 불가양(不可讓)의 권리, 2) 궤도 상 우주물체의 안전과 안정성 보호, 3) 각국의 적법한 국방이익의 고려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확정하고 당사자의 행동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단순한 선언적 원칙보다는 국가들의 준수 의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행동규범에 대해 미국정부는 2014년부터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바꾸어 전향적인 논의를 거쳐 국가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다면 행동규범의 공식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서방 주도의 행동규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찍이 2008년에 ‘우주에서의 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조약(PPWT: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the Outer Space Treaty)’의 채택을 주장하였으나 미·EU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쳐 본격적인 협상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러시아는 조약 초안 개정안을 군축회의에 제출하였으나 미국 등은 조약에 검증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 진영 간의 의견 격차가 남아 있는 현재로서는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새로운 레짐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된다.

라. 인권 레짐과 테러방지 레짐 간의 긴장과 갈등 증폭

2017년에도 인권 관련 법·제도와 테러방지 법·제도 간의 긴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반(反)이슬람정서, 반(反)이민정서에 편승한 테러방지·난민비(非)수용 정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행위 및 대량난민 사태는 인권 문제에 대해 호의적이던 국가들까지 이민과 난민보호에 관한 입장을 바꾸게 만들었

고, 테러방지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광범한 데이터수집 및 감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의 발호, 그리고 수년째 해결의 기미가 없는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약 500만 명 규모의 난민 집단이주 상황은 난민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EU에서조차 난민 쿼터제 실시 등 반이민정서에 편승한 정책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한 테러세력의 유럽 내 무차별 살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난민의 유럽 이주 시도는 테러리스트 잠입가능성 차단이라는 명제와 정면충돌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이슬람정서가 확대되면서 헝가리,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등에서는 국경통제 및 장벽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2016년 3월 EU와 터키가 체결한 난민 송환 조약에 따르면 EU가 터키에 60억 유로를 지원하고, 터키를 거쳐 그리스에 불법으로 입국한 난민은 터키로 송환되며, 대신 터키에 등록, 수용된 난민은 송환자 수만큼 EU 각국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 심사 대신 일괄적 처리를 우선하는 것으로서 집단추방에 해당한다는 자이드 알 후세인(Zeid Al 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난민을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난민에 관한 국제관습법인 ‘농 르폴망(non-refoulement)’ 원칙과 EU가 비준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상의 의무와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2017년에는 난민 문제에 대해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UN 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를 중심으로 난민의 분류 및 정착지원국으로의 이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UN 난민기구는 2016년 3월 시리아 난민의 10% 규모인 48만 명을 시리아 인근 국가 외의 다른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시리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다만 UN 난민기구 자체의 인력 및 재원의 부족으로 진척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들이 정착지로 선호하는 EU 국가 전체에 적용될 난민 분류 체계의 점점

및 개선 등도 시도될 것이나, 난민들의 첫 도착지 국가에 난민 보호 및 분류 책임을 지우는 ‘더블린 조약’이 존속하는 한 그러한 시도는 한계를 노정할 것이다.

2017년에는 테러방지 정책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하는 측면에서 불거지는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경우 2015년 11월 파리 테러에 이어 2016년 니스에서 대형트럭을 이용, 프랑스혁명기념일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공격하여 84명이 숨지는 테러가 발생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며 테러방지정책의 확대실시에 나섰다. 그 정책의 하나는 개인의 통화기록,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권의 인정인데, 이는 시민적 자유의 하나인 사생활에 관한 보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파리 테러 이후 대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광범한 데이터 수집 허용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회사 및 인터넷 업체들의 암호화기술에 이른바 “뒷문(back doors)”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암호 해제 및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제임스 코미 국장이 발언한바 있다. 이러한 테러 방지대책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및 불법적 간섭의 방지와 충돌할 여지가 큰바, 2017년에도 이러한 인권 관련 조약 등의 규범과 대테러 방지대책 간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마.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현상 가시화

2016년 부룬디와 남아공, 감비아의 탈퇴로 개시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존립 위기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불참 속에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로 힘겹게 정당성을 유지해 왔던 ICC는 그 운영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며, 2017년에는 향후 재판소 운영 개선에 관한 논의가 대대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나 뚜렷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불안정과 내전, 독재정치 등으로 인해 집단학살과 인권유린의 불행이 반복되어 왔고,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의 창설과 그 운영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자국민이 ICC의 조사 및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아프리카 각국은 ICC 규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부룬디의 경우 금년 4월에 ICC가 2015년 4월의 부룬디 대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유혈사태와 정치적 위기상황에 대한 예비조사(preliminary examination)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자 ICC 탈퇴를 선언하였다. 남아공의 경우 다르푸르(Darfur) 학살사태혐의로 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CC로부터 비판을 받자 ICC 탈퇴를 추진해 왔으며, 2016년 10월 21일 탈퇴를 선언한 상태이다. 또한, 감비아는 2016년 10월 26일 ICC로부터 탈퇴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이유는 ICC가 아프리카 이외 국가들의 전쟁범죄를 수사하지 않으면서 아프리카인만을 인종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한다는 것이었다.

잇단 아프리카 국가들의 ICC 탈퇴에 관하여 시디키 카바(Sidiki Kaba) ICC 당사국총회 의장은 11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3개국의 탈퇴 결정 재고를 요청하면서, 아프리카에 편중된 사건 조사 및 기소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ICC의 관할권 확대, 회원국 수 증대, 재판소 예산 증액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당사국들 및 강대국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가 큰 문제들이어서 손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17년 1월 아프리카 연맹(AU: African Union) 정상회의에서 ICC 탈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탈퇴를 선언한 국가들 외에도 나미비아와 케냐, 우간다 등 여러 나라가 추가로 ICC 탈퇴 가능성을 내비

치고 있으며, ICC가 아프리카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작은 구실만으로도 탈퇴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아프리카 연맹의 사법기관인 아프리카 사법·인권재판소(ACHPR: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의 권한을 확대하여 전쟁범죄 등도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연이은 ICC 탈퇴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4. 기후변화

가. 신기후 체제 움직임 강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이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강조됨으로써 2017년에는 신(新)기후 체제를 위한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파리협정의 발효 요건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 국가 이상의 비준이 2016년 10월 5일 충족됨에 따라 30일 후인 11월 4일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하였다. 2016년 12월 10일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197개국 중 파리협정을 비준한 당사국은 117개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에서 개최된 21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1: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파리협정이 타결된 것이 불과 1년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파리협정이 발효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행동의 시급성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올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 조항 및 규칙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사국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절차적 딜레마에

봉착하였으나,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1차 당사국회의(CMA1: the 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를 우선적으로 개최하고, 절차적인 문제만 논의한 후 정회하기로 하였다. 이후 1차 당사국회의를 2017년 말 COP23 계기에 다시 속개하여 후속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2018년 COP24 계기에 모든 후속 협상의 완결 후 다시 속개하여 파리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이 당사국들에게 국제법적으로 구속적 성격을 갖는 다자 조약으로 발효됨으로써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2020년 이후 수립될 신기후 체제는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게임의 법칙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한 트럼프 후보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야기된 ‘트럼프 쇼크’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대표들은 파리협정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COP22의 주요 임무가 파리협정의 이행이라는 점을 역설하였고, 회의에 참가한 190여 개 당사국은 설사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의 이행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irreversible) 국제적 책무가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특정 행정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당파적인 문제가 될 수 없고, 트럼프 신 행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시장에서의 민간기업 활동 및 주(州)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도 트럼프 신행정부의 태도와 관계없이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였다. COP22에 참가한 어떠한 당사국도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트럼프 쇼크’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기후 체제를 위한 움직임은 올해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COP22는 향후 전개될 파리협정 세부 조항 및 규칙 확정과 관련한 모든 후속 협상의 종료 시한을 2018년 말로 공식적으로 못 박음으로써, 향후 후속 협상의 작업 일정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후속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 ‘트럼프 쇼크’로 인한 불확실성 잠재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당사국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될 경우 후속 협상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후변화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날조한 사기(hoax)라고 주장하면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재정지출을 끊어 버리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국제 기후변화 커뮤니티에 일대 충격을 가했다. 파리협정 발효 3일 후인 2016년 11월 7일 개시된 COP22는 파리협정 발효에 고무되어 신기후 체제 수립에 대한 매우 긍정적 전망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불과 하루 뒤 트럼프 후보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트럼프 쇼크’에 빠졌다.

미국의 트럼프 실행정부는 파리협정이 부과하는 국제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양한 절차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진바, 미국의 파리협정 이탈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방안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인데, 이는 최소 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파리협정 28조에 의하면, 탈퇴 의사가 있는 당사국은 최소 협정 발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탈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그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탈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은 파리협정의 토대를 이루는 UNFCCC에서 탈퇴하는 것인데, UNFCCC 탈퇴에 걸리는 시간은 탈퇴 의사 표명 후 1년이다. 이에 따라 미국 트럼프 실행정부는 파리협정에서 직접 이탈하는 방안보다 법적 소요시간이 짧은 UNFCCC에서 탈퇴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리협정 합의 도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미국이 과거 1997년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이탈했던 것과 같이 또다시 파리협정 체제에서 이탈한다면, 유엔 기후변화 후속 협상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약화될 경우, 개도국이 협상에서 더욱 우위에 서기보다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후속 협상이 오히려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후속 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갈등 격화 가능성 대대

개도국 협상 진영이 주요 의제에서 파리협정 이전의 입장으로 회귀하는 경향(pre-Paris)을 강하게 보이면서, 2017년 후속 협상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과 개도국 협상 진영 모두 파리협정 그 자체는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향후 후속 협상의 초점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와 절차를 확정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협상 진영은 핵심 의제에 있어서 선진·개도국 간 이분법적 차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가별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논의가 ‘선진·개도국에 대한 차별화가 없는 감축 중심의 논의(mitigation-centric without differentiation)’가 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개도국 협상 진영은 선진·개도국을 구분하지 않고 파리협정 당사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후변화 대응 의무는 국제법적으로 단일한 성격임을 인정하지만, 그 의무는 내용적으로 단일한 것이 결코 아니며, 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 다른 내용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개도국 협상 진영은 선진·개도국 간 차별화가 파리협정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기술적 차별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의 주장은 차별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선진국의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COP22를 기점으로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차별화에 대한 선진·개도국 진영 간 고질적인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후속 협상에서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은 파리협정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즉, 파리협정의 각 조항들은 의제별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모순되고 대립되는 요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세부규칙(rulebook)을 정하는 후속 협상에서 양 진영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인용하면서 상호 대립적인 주장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전개될 후속 협상에서는 세부 의제의 제도화를 둘러싸고 협상의 난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 감축과 관련한 NDC의 특징, 포함될 정보의 내용 및 산정방식 결정을 국가의 자원에 맡길지의 여부, 2) 감축, 적응 및 지원에 대한 측정·검토·보고(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에 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에 별개로 적용되는 두 개의 투명성 체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3) 지속가능개발체제(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규제에 관해 개도국에 유리한 교토의정서 상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전례를 따를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선진·개도국 진영 간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공공외교

가. ‘주창형(主唱型) 공공외교’ 부상과 ‘미디어 외교’ 강조

2017년에도 ‘주창형(主唱型) 공공외교(advocacy public diplomacy)’와 ‘미디어를 통한 외교(mediated public diplomacy)’가 주변 강국들의 공공외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국들의 공공외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이 두드러진다.

첫째, 문화외교를 통해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지정학 현실과 여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자국의 정체성을 설파하는 적극적인 ‘주창형 공공외교’의 대두가 두드러지고 있다. ‘투사형(投射型) 공공외교(projection public diplomacy)’가 주로 국가 이미지나 정체성의 본원적 요소들을 강조하는 반면, ‘주창형 공공외교’는 지정학적 현실 인식이나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이 구성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의 유형이며, 주로 정책공공외교(policy advocacy)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주창형 공공외교’에 반영되는 민족/국가 정체성의 요소들은 국내 정치적 경합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외교정책의 비전이나 목표로 설정되어 해당 국가의 외교정책 정체성(foreign policy identity)으로 표현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선거에 따른 행정부의 변화가 이러한 경합과 선택의 기제가 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지배 엘리트의 인식이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혁명으로 미디어의 탈(脫)영토화가 진행되고 ‘주창형 공공외교’가 부상함에 따라, 전 세계적 파급력과 반향력이 큰 신·구 ‘미디어를 통한 외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공공외교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보 전쟁(information war)’, ‘미디어 전쟁’이 공공외교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나. 한국의 ‘주창형 공공외교’ 플랫폼의 다변화

2017년은 한국 공공외교 제도화의 출발점이 되는 해로서, 쌍방향적 교류와 다변화 플랫폼을 추구하는 한국형 ‘주창형 공공외교’의 기틀을 다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외교법’은 무엇보다도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외교 조직적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단기 및 중기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 이래 한국의 공공외교는 한류(韓流)가 선도하는 문화외교가 그 주류를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다. 문화외교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공공외교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제는 한국의 정체성을 설파하는 ‘주창형 공공외교’를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2017년에는 공공외교 전반, 특히 문화외교의 한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류에 대한 문화산업적 접근을 지양하고, 일방적 전파보다는 쌍방향적 교류와 상대방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공외교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협력적 양식(collaborative public diplomacy)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식 외교’, ‘미디어 외교’, ‘기업 공공외교’ 등 문화외교 이외의 공공외교 각론 분야에 대한 심화된 접근을 통해서 한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감시키는 공공외교의 다변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주창형 공공외교’는 주로 강연, 기고와 같은 ‘독백형’과 회의체를 이용한 ‘대화형’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플랫폼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회의체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사실상 국내 여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전문가, 학자, 여론과 같은 정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국의 역할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발신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국제 회의체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 미국의 신고립주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역할 정체성 설파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신행정부는 내향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면서 신고립주의를 정당화하는 공공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창형 공공외교’의 강화와 더불어 앞으로 주목을 요하는 것은 트럼프 신행정부의 공공외교의 추이이다. 2차 세계대전 이래 지난 70여 년간 미국은 개입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통해서 전후 세계질서를 구성하

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인권, 개인적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이른바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립하고 전파하는 가치지향적 공공외교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이 내향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신고립주의로 선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과거와 달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사(world affairs)로부터의 ‘철회(disengagement)’를 강조하고, 자국의 역할 축소를 정당화하는 공공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타자’와의 차이를 강조하되 타자를 곧 ‘적(enemy)’으로 등가시(等價視)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포용하지도 않는, 즉 상대방의 영향권을 용인하는 축소되고 타협적인 역할 정체성의 형태로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공세적 공공외교’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포용적 공공외교’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다.

라. 러시아와 중국의 대안적 가치 지향 공공외교 추구

2017년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점과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주창형 공공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집권 3기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자유주의적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러시아정교회(Russian Orthodox Church)가 러시아적인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한 반응적 대응으로부터 나아가, 세계사에 대한 자국의 관점과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는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주창형 공공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국제관계의 민주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등 중국식 답론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서구적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안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외교, 즉 물질적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는 접근과 정부의 일방적인 선택적 경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제시하는 대안적 가치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영 신화통신사, 환구시보(Global Times) 등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양상과 브렉시트(Brexit)를 민주주의 결함으로 비판하면서, 자국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설파하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난전상을 비판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 체제의 우월성을 설파하고 있다. 2017년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적 가치를 보다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narrative)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주창할 것으로 보인다.

마. 일본의 보수적 민족주의와 수정주의 공공외교 전개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일본도 과거사와 안보 문제에 대한 보수적 민족주의와 수정주의 양상이 더욱 강화된 공공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아시아에서 가시화될 경우, 향후 일본의 수정주의는 평화헌법 개헌 논의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특히 과거사와 안보 문제에 관한 공세적인 ‘주창형 공공외교’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2기에 들어서 일본의 외교 정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수정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과거사 수정의 차원으로서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강조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측면이 역사 수정주의의 형태로 일본의 공공외교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 헌법에 반영된 전후 평화주의의 수정이고, 셋째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수정 차원으로서,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전후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는 전후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외교에서와는 달리, 공공외교에 경쟁적이고 공세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는 해외 일본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인적 교류 및 해외공관 활동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총서의 영어 번역 사업과 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부 록

약어표

A

ACHPR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	아프리카 사법·인권재판소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대안당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아프리카민족회의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B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 협력기구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BJP	Bharatiya Janata Party	인도 인민당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신흥경제 5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C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국 중앙정보국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MA1	the 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1차 당사국회의
COC	Code of Conduct	행동규범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
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공동안보방위정책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

D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

E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 경제연합
EAS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
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환경상품협정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3+3	UK, France, Germany, US, Russia, China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

F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 식량농업기구
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무장혁명군
FATA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부족자치지역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 연방수사국
FN	Front National	국민전선
FRB	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 지대

G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기구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정부조달협정
GRQ	General Review of Quotas	일반 쿼터 검토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
G20	Group of 20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이상 G8)와 한국,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EU 의장국
G7	Group of 7	선진 7개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I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oC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우주활동 행동규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슬람국가

J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	------------------------------------	------------

M

MC	Ministerial Conference	각료회의
MD	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MERCOSUR	Mercado Comundel Sur	남미공동시장
MPLA	Popular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앙골라해방인민운동
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측정·검토·보고
M5S	Movement 5 Star: Five Star Movement	오성운동

N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별 기여방안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SG	Nuclear Suppliers Group	핵공급그룹

O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1MDB	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원 말레이시아 개발

P

PA	Pacific Alliance	태평양동맹
PBOC	People's Bank of China	중국인민은행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중재재판소
PMD	Possible Military Dimension	군사시설
PPWT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the Outer Space Treaty	우주에서의 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조약
PRO	Propuesta Republicana	공화주의제안당
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복수국가 간 협상
P5+1	UN Security Council's five permanent members (China, France,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plus Germany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과 독일

R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S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안보협의회의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
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지속가능개발체제
SDR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S&ED	Strategic & Economic Dialogue	전략경제대화

T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다자간 서비스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U

UKIP	UK Independence Party	영국독립당
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통일말레이국민조직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위원회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GG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UN 전문가그룹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 난민기구

W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	--------

연구에 참여한 분들



|집필진| 제I장 2017 국제 정치·경제 개관 (편집진)

제II장 한반도 정세

1. 북한 (이상숙 연구교수)
2. 남북관계 (전봉근 교수)

제III장 동북아 정세

1. 동북아시아 (최우선 교수)
2. 미국 (김현욱·민정훈 교수)
3. 중국 (이지용·김한권 교수)
4. 일본 (조양현 교수)
5. 러시아 (고재남 교수)

제IV장 주요 지역 정세

1. 동남아시아 (배공찬 교수)
2. 서남아시아 (신동익 소장)
3. 중앙아시아 (고재남 교수)
4. 중동 (인남식 교수)
5. 유럽 (전혜원 교수)
6. 아프리카 (김동석 교수)
7. 중남미 (손혜현 연구교수)

제V장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 국제 금융·통화 (강선주 교수)
2. 국제 통상 (유준구 연구교수, 최원기 교수)
3. 국제법과 레짐 (황승현·김덕주·심상민 교수, 유준구 연구교수)
4. 기후변화 (최원기 교수)
5. 공공외교 (김태환 교수)

| 편집진 | 김덕주·이지용·심상민·민정훈 교수

유준구·손혜현 연구교수

고동우·김기선·조민근·김유철·박미경·윤지혜 연구원

2017 국제정세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Tel. (02) 3497-7600 Fax. (02) 575-5245
<http://www.ifans.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3-10

ISSN 2005-8691